

“한일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서 발간 및 국제 워크숍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과 곤경

주 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 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23.8.25.^(금)
13:00-17:00

온라인 zoom

- 목차 -

<1부> 국경을 넘는 시민연대의 모색들

‘관부재판’에 관여하며	2
--------------------	---

하나후사 도시오 (전후 책임을 묻는다·관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부재판』 저자)

오메가메 다저온 소소한 한일연대들	17
--------------------------	----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대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정책 과정 연구	34
-------------------------------------	----

츠치노 미즈호 (메이세이대학 준교수)

<2부> 포스트 식민 법정의 경험들

‘2000년 여성법정’의 성과와 경험을 말한다	52
---------------------------------	----

이케다 에리코 (wam 전 관장)

‘2000년 여성법정’과 한일 시민사회 연대	63
--------------------------------	----

양미강 (2000년 여성법정 당시 한국위원회 실무책임자, 현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교차적 행위성	70
---------------------------------------	----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1부>

‘관부재판(부산 종군위안부 · 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사건’)에 관여하며

하나후사 도시오

(전후 책임을 묻는다·관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부재판』 저자)

‘관부재판(부산 중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사건)’에 관여하며

하나후사 도시오

전후 책임을 묻는다·관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부재판』 저자

1990년대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이하 ‘위안부’) 재판이 일본에서 9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가 한국인 2건, 재일한국인 1건, 중국인 3건, 대만인 1건, 필리핀인 1건, 네덜란드인 1건이었습니다. 관부재판의 특징은 피고가 국가 일본인데 일본의 행정기관이 있는 도쿄가 아니라 지방 법원(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제소했다는 것과 원고 10명 중 7명이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에서 원고인 ‘위안부’가 승소하면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준 재판이었습니다.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김문숙 회장)에 신고한 ‘위안부’ 2명과 여자근로정신대 2명은 1992년 12월에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에 제소하며, 일본 정부에 ‘국회와 유엔에서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소한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을 후쿠오카로 초청하여, 재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후쿠오카 시민 10명 정도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환영회를 해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안부’ 원고인 박두리 씨는 “일본사람은 다 귀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거야?” 하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 강하게 흔들리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의 추가 제소에서는 ‘위안부’ 원고가 3명, 여자근로정신대 원고가 7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금주 씨가 이끄는 광주유족회에 속한 ‘위안부’ 이순덕 씨와, 여자근로정신대 양금덕 씨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관부연락선에 몸을 싣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피해지로 끌려갔기 때문에 부산(釜山)과 시모노세키(下関)를 잇는다는 의미로 이 재판을 ‘관부재판(関釜裁判)’이라고 했습니다.

관부재판은 광주유족회 재판(전 일본군 군인-군속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광주천인소송 등)을 맡았던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씨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을 맡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은 보통 수도권 도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사들은 ‘도쿄지방법원에는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 있고, 출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기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승산이 없다.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했으면 한다. 작은 도시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방법원의 지부 같은 곳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쫓지 않는 기

개 있고 양심적인 판사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 작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인 1993년 4월, 국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정부 기관이 있는 도쿄에서 해달라. 시모노세키에서의 재판을 취소하고 도쿄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 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시모노세키는 원고들이 끌려와 각지의 군수공장과 위안소로 보내진 범죄지다. 또한 고령의 원고들이 도쿄까지 오가는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시모노세키에서 재판을 해달라” 는 상소장을 시모노세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도쿄지방법원 이송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한 달 만에 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시모노세키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의 이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때 서명을 해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500명 정도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이 되어 긴 싸움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 3,000엔과 후원금으로 일년에 네 번 있는 원고들의 재판 교통비 및 체류비와 관부재판뉴스(800부 정도) 발행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우리집 등에서 머물고, 지지자들과의 식사 모임과 교류회를 통해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법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들은 일본 정부에 피해를 호소하고 규탄하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나가면서 자존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 갔으며, 재판을 위해 일본에 오는 것을 매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위안부’ 원고 이순덕 씨의 장렬한 증언

94년 9월에 원고인 ‘위안부’ 이순덕 씨의 본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1918년 전라북도 이리군에 있는 모현이라는 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네 명이었어요. 소작지도 없어서 남의 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초가집에 살며, 저와 동생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1937년, 제가 저녁밥을 준비하려고 쭉을 뜯고 있는데, 마흔 살 정도 되는 조선인 남자가 와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나를 따라가면 신발도 주고, 옷도 주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신발도 없고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남자의 말에 넘어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남자는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렸다. 시간이 없다” 며 내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여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농가의 딸 열네다섯 명이 한 방에 갇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일본인 남자 세 명에게 넘겨졌습니다. 기차에서 이틀 밤을 자고 상하이에 도착해 세 시간 정도 트럭에 실려 일본 육군의 주둔지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큰 군용텐트가 있었고 그곳에서 병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거적을 세운 벽에 싸리나무를 엮어 만든 지붕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우리는 한 명씩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낙엽 위에 대나무로 엮은 깔개를 깔고 그 위에 담요가 덮여 있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두막 앞에 군인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로 우리를 강간했습니다. 우리는 임신하지 않기 위해 606호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양동이에 받아온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한 장교가 “나와 약속해놓고 왜 다른 남자와 잤냐?” 고 화를 내며 군화로 내 배를 힘껏 걷어차고 칼로 등을 베었습니다. 나는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오두막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상처 치료를 받았지만 배와 등 부위의 상처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고 비만 오면 지금도 아프고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는 지붕 없는 화물차를 타고 비를 맞으며 며칠에 걸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시다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남동생만 있었습니다.

저는 농가 일을 거들며 살다가 일 년 후 열일곱 살 연상의 남자를 소개받아 그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 남편의 아이들과 부인이 나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한참 있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해서 광주로 오게 됐어요. 남편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나이도 많아서 제가 재판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위안부’를 해서인지 나는 결국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매달 십오만 원과 쌀을 지원받아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쌀은 이 주일 정도면 다 떨어져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개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총리 앞에 가서 자살할 생각입니다.”

이순덕 씨는 진술 도중에 그녀가 말한 대로 변호사가 그린 위안소 그림을 보여주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일본도에 베인 허리가 아프다”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실신했습니다. 재판 방청을 온 의사가 맥박을 측정하고 얼음으로 머리를 식혀주었고, 같이 온 이금주 씨가 기도하며 돌봐주어 회복하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지는 장엄한 증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이순덕 씨는 종종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본인 신문을 거쳐 판사들은 1998년 4월 27일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모든 ‘위안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명령하는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문을 인쇄해 도쿄로 가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근로정신대 원고는 ‘‘위안부’ 원고에 비해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분노는 굉장했고, 울부짖으며 판결의 부당함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는 히로시마시, 후쿠야마시, 미요시시 등 히로시마현 내 세 곳에 지원 모임이 만들어져 지원이 확산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십육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에게 모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일 시민 공동 서명부’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고등법원에는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개 있는 판사는 없었고, 2001년 3월에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심장이 내려앉는’(박두리 씨) 듯한 충격을 받았고 울고 소리 지르며 항의를 거듭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인 약 이백오십 명 정도되는 지지자들은 원고들을 둘러싸고 죄송한 마음에 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후 상고했으나 2003년 3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허락지 않는 투쟁

1994년 6월 30일부터 1998년 6월까지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를 중심으로 한 연립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전후 보상에 관심이 있던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총리에 취임하고 8월 중순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민들의 모금으로 ‘민간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낼 수는 없다, 대신 일본 국민들의 모금으로 ‘속죄금’을 만들어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정부는 사무비만 부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민간기금’ 구상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을 때, 마침 재판의 본인 신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려고 후쿠오카에 왔던 이순덕 씨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동정의 돈은 필요 없다. 일본이 제대로 내 앞에 와서 사죄하고 돈을 내면 기꺼이 받겠다. 빨리 해 달라. 죽고 나면 늦다”고 하며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94년 8월 20일, 이순덕 씨와 관부재판을 지

원하는 모임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로금 구상’의 백지화와 국가 책임에 따른 개인 보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재판의 본인 신문을 위해 후쿠오카에 와 있던 이순덕 씨와 지원하는 모임은 8월에 발표된 개인 보상 등을 돌린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긴급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80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에서 정대협 부산협의회 김문숙 대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를 선두로 행진하며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일본 국가의 가해 책임에 따른 개인 보상을 호소했습니다.

10월 6일, 민간기금 구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도쿄에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労働組合)과 도쿄에서 ‘위안부’ 피해자 등 한국 유족회의 전후 보상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모임(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会)’은 민간기금 구상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곳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뿐이었다. ‘일본의 전후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모임’ 대표와 제가 민간기금 구상의 찬반 입장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민간기금 구상을 허용한다면 이순덕 씨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민간기금 구상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내서 동의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각 신문사에 문의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000만 엔이 든다고 했고, 평소 알고 지내는 마이니치 신문 기자에게 물어보니 3분의 2면에 600만 엔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관부재판을 지지하는 모임의 사무국 회의에 안건으로 내놓고 오랜 토론 끝에 의견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28일 홋카이도, 29일 도쿄, 30일 니시니혼)에 마이니치신문 전국판의 3분의 2면을 사용해 “일본군이 저지른 죄는 일본 정부가 보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간기금’으로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와 보상을 요구합니다.”라고 호소하며, 한국 ‘위안부’ 김학순 씨, 이순덕 씨, 재일한국인 ‘위안부’ 송신도 씨 등의 항의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윤정옥 씨와 ‘위안부’ 문제 연구자 요시미 요시아키 씨 등 지식인 30명이 동참했고, ‘일본의 전후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모임’을 비롯해 많은 지지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내외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이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한국에서는 피해 당사자들 중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아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 구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생각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개입으로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문제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②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자해 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③ ②의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②에서 밝힌 조치가 착실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직후부터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피해자와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백지화하고, 재협상하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한국 시민들의 반발은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고 기시다 외무대신을 통해 전달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대신에게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 없이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돈도 낼 테니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해결은커녕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정치적으로 맺은 결말일 뿐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가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합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방문하여 총리의 사죄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피해자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요청서를 회원들 각자가 보냈습니다.

후쿠오카현이 지역구인 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베 총리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원통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우익적 민족주의와의 투쟁

재판 지원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1997년 중학교 7종의 역사교과서 모두에 ‘위안부’ 기술이 실리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우익 학자들이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연행, 난징대학살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이하, ‘새역모’)을 결성했습니다. 그 발족 집회가 1997년 4월 29일에 후쿠오카시에서 후지오카 노부카츠 도쿄대 교수(당시)를 비롯한 각 대학교수와 후쿠오카 출신의 유명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 씨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후쿠오카현 고등학교 교직원 노조에서 탈퇴한 보수 성향의 제2조합이 주최한 것으로, 큐슈 일대에서 교사들이 모여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새역모’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서 채택하게 하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회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우지 마라,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당한 일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준비했고, 그 전단지를 재판에 온 원고들과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집회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9월 후쿠오카 시의회와 현의회에 ‘새역모’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원들과 함께 삭제 요청을 봉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에 반대하며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채택을 저지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도쿄에 모여 합숙하면서 전국적으로 전후 보상과 역사 인식을 둘러싼 싸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간의 논의를 거쳐

① 아시아 전쟁피해자들의 전후 보상 운동이 일본 내에서 큰 공감을 얻는데 반발하여 ‘새역모’ 등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언행이 국론을 양분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주변국들에게 강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역사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

이 제일 중요한 정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② 강력한 권한과 체제를 갖춘 전쟁 피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민간에서만 조사 외에 새롭게 정부 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정치인과 국민 전체가 공유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가해의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아픔과 원통함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죄와 배상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③ 입법화 운동은 전후 보상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 시민단체와 더불어 교과서 공격에 맞서 싸우는 각지의 시민단체, 학자, 정치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11월 29일 ‘전쟁 피해 조사회법(戰爭被害調査會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를 발족하여 진상 규명 법안 제안과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1998년 4월 27일 관부재판에서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입법 운동에 획기적인 지평을 연 것입니다.

야당 제1당인 민주당에서 전후 보상에 관심이 많은 다나카 코우 의원은 “입법부로서 과거 전쟁의 경과, 전쟁 중과 전쟁 후에 관한 일련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초당적 의원연맹을 만들어 진상 규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싶다”며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1심 판결 후 지역의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의욕적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을 국회로 보내 그들이 국회에서 입법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오랫동안 집권해온 보수적 자유민주당을 대신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전쟁에 의한 아시아 각국의 피해 진상규명법’과 ‘위안부’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시민운동과 함께 힘써 온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의 시민운동에 호소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을 결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요청 활동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권에서 떠나있던 민주당 정권은 국회 운영이 부실하여 하토야마 총리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간 나오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여 입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위안부’ 문제 등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가 총리로 등장해 장기 집권하면서 ‘진상규명법’ 통과와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혼동

2021년 1월과 4월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위안부’ 동원’ 부분 ②항에 ‘지역 유지, 공무원, 학교 등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 ⑤항 ‘근로정신대 공출제도를 통한 동원 방식’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역사 인식은 운동단체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수 씨는 202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를 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씨는 관부재판 히로시마 고등법원 재판에 몇 번이나 지원하러 오셨습니다. “전쟁 후 ‘위안부’로 오해받아 부끄러웠다”고 재판에서 발언한 근로정신대 원고에게 재판이 끝나고 있는 교류회에서 “이용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운 것은 ‘위안부’ 제도를 만든 일본 정부”라며 격노해서 그 발언을 한 원고가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이용수 씨는 근로정신대에 갔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위안부’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혼당해서 홀로 아이를 키워온 원고들의 고충을 알기에,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운동단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졸업한 지 1, 2년 지난 소녀들이 패전이 임박한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일본인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애국을 위해 일본 공장에 가서 일해라. 일하면서 여학교에 다닐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지원’했습니다.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 1,089명, 나고야의 미츠비시 비행기 공장에 300명, 시즈오카의 도쿄 마사 방적공장에 3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와카야마현의 군수공장, 후쿠오카현의 일본제철에도 수십 명씩 보내진 기록이 있습니다.

군대에 간 남자 노동자들이 하던 선반공 같은 중노동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학교도 못 다니고, 밤에는 미군의 공습에 시달리고, 나고야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혹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속은 채로 비쩍 말라서 전쟁이 끝난 후 부모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신대가 ‘위안부’로 간주되는 한국 사회에서 숨죽이며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에게 일본에서 일했던 과거가 알려지면서 ‘더러운 여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폭력과 멸시를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들이 “속여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을 사과하라! 일한 월급을 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내걸고 재판에 임해 왔습니다.

영화 ‘허스토리’의 문제점- 한국에서 ‘관부재판’이라는 책을 낸 계기

2018년 한국에서 관부재판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원고단의 리더였던,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박소득 씨가 일터에서 ‘위안부’로 동원됩니다. 원고들이 재판을 위해 일본에 오면 일본인들이 돌을 던지고, 법원에 우익들이 몰려와 지저분한 야유를 퍼붓고, 머물던 여관에서 차별받으며 쫓겨나는 등 사실무근의 내용이었습니니다. 일본 사회가 혐오 표현과 ‘위안부’ 차별로 가득 찼다는 편견으로 그려졌습니다. 90년대 일본 사회는 외국인 전쟁피해자에게 호의적이었으며, 60건 이상의 전후 보상 재판에는 각각 일본 시민들이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변호사는 무료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신문 등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전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6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로정신대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하는 내용을 방지할 수 없어 항의문을 보냈더니 감독과 프로듀서가 해명을 위해 후쿠오카로 왔습니다. 감독은 “사실무근이 아니다. ‘위안부’ 증언집’에 여자근로정신대에서 강제로 위안부가 된 증언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도 가명을 사용한 세 명의 여자근로정신대의 증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무지인 후지코시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진 가공의 증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한 증언에는 ‘공습으로 공장이 불타고 일자리가 없어져 회사에서 아오모리현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로 30명 정도 보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후지코시 공장은 공습 피해가 없었으며, 패전 때까지 가동했습니다. 다른 증언들도 사실과 다르게 창작된 것이었습니다.

1993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에 나섰을 때, ‘정신대 피해자’로 보도되면서 많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실명을 밝히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위안부’ 피해자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름을 밝히며 나온 피해자를 인터뷰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고하러 온 여자근로정신대 분들이 정신대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위안부’와 혼동한 남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혼당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위안부’로 등록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위안부’로 등록한 몇 분의 여자근로정신대가 ‘위안부’ 증언집’에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전하자 감독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는 자막을 영화 첫머리에 넣겠다고 해명하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눈길’에서도 여자근로정신대 소녀가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습니

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관부재판과 일본 사회의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관부재판” 책을 한국에서 출간했습니다(2021년 5월 도토리숲). 저는 소녀상이 근로정신대 소녀를 모델로 한 게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의 의연한 모습의 소녀상은 열세 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분위기와 비슷하며, ‘위안부’로 동원된 농촌의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일 민족주의의 부정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관부재판 원고의 리더 역할을 해 온 박소득 씨는 관부재판의 1심 승소 판결 후 한국 방송국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한국 TV에서 보도된 후 주변 사람들이 ‘위안부’로 혼동했고, 가족들이 재판을 그만두라고 간청해서 그 스트레스로 가벼운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하는 것이 싫다기보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화난다**”며 분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뇌출혈 후 유증으로 기억을 점차 잃어 매년 찾아가던 우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여름, 관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온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에게 “‘위안부’와는 다른 피해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체 이름도 바꿔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 끝나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 미츠비시 비행기 공장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혼동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 지방법원의 ‘위안부’ 역사 인식에서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만들어져 전쟁 전에 탄광 등 기업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피해 실태가 규명되었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서도 동원된 기업과 재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8년에는 한국어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노동 동원 조사’가 발간**되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학적부에 기록된 동원한 기업의 조사, 당시 신문기사 조사, 일본 국내에서의 여자근로정신대가 기업이나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 내용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대와 ‘위안부’는 전혀 별개의 존재임

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선입견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의 상세한 조사나 일본에서의 여자근로정신대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제의도 무시한 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의 강제 동원을 강조하며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굳이 여자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일본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유명 언론인이자 보수 논객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텔레비전에서 “정신대에서 ‘위안부’를 동원했다면 일본의 국가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최초로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1991년 8월에 ‘소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끌려간 조선인 종군 위안부’를 보도해, 나중에 보수논객들에게 비판을 받아 2014년 말에 대대적인 ‘사죄와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자정신대는 군수 공장 등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안부’와는 전혀 다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광주의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 -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자서전”을 제작해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했습니다. 그 책에는 전쟁 전과 후의 처참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책 속의 세 명의 할머니 중 두 명은 우리가 깊이 관여해서 지원했던 분들입니다. 여자근로정신대 분들은 패전 당시 열두 살에서 열다섯 살이었으며,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이 외에도 동원 과정, 전체 숫자, 패전 시처우 등에 대한 의견 차이와 대립이 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시하고 싶거나 가볍게 보고 싶은 우익 성향의 연구자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우익들은 한국 사회의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혹은 과도한 역사 인식을 비판하며 험한 감정으로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여론은 장기화되고 있는 전후 보상 문제와 한일 갈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 공동으로 냉정하게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검증하면서 공통의 역사 인식을 정립하여 두 나라 국민과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들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별

재판이 끝난 후, 원고들은 더 이상 일본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부부가 가끔은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매년 원고들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유찬이 씨, 강용주 씨, 의령의 박순복 씨, 광주의 양금득 씨, 유족회 회장인 이금주 씨, 서울의 박소득 씨와 ‘평화의 우리집’에 계셨던 이순덕 씨, 나눔의 집 박두리 씨.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위안부’ 원고에게는 입법 해결 경과를 보고하고, 후지코시 여자근로정신대 원고에게는 도야마에서 후지코시 기업을 소송한 제2차 후지코시기업 재판의 경과 등을 보고한 후, 함께 노래도 부르고 잡담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유찬이 씨가 만든 음식이 맛있었으며 자주 집밥을 해 주셨습니다.

방문을 거듭할수록 원고들은 노쇠해졌고 이별은 건딜 수 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나눔의 집에서 사는 ‘위안부’ 원고 박두리 씨는 헤어질 때 “빨리 가라, 빨리 가” 하고 손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년에 광주에서 서울 ‘평화의 우리집’으로 이사한 이순덕 씨는 우리의 방문을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재판 당시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그녀들의 앨범을 보며 반평생 동안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는 현관에서 울면서 배웅해 주셔서,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제 아내도 울었습니다. 2006년 2월 19일 박두리 씨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2017년 4월 4일 이순덕 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가게 예약 손님이 꼭 차서 갈 수 없어서,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른 회원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 원고들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우리를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숨겼을 겁니다. ‘위안부’였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원고를 방문하는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원고들이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짧은 여행도 즐겼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유찬이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0세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던 자신의 생활 리듬을 깨뜨리지 않았고, 재판을 위해 왔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꼭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했고, 뒤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며 항상 의연했습니다. 유골은 유찬이 씨의 유언에 따라 바다에 뿌렸다고 합니다.

방문을 마치고 헤어질 때, 보통은 “내년에 만나요!” 라고 말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찬이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우리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별인사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셔서 피해자의 실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알기 쉽게 피해자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보듬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오메가메 다져온 소소한 한일연대들

안이정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대표)

오메가메 다져온 소소한 한일연대들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 대표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형편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고 직장에 변동이 생기면 같이 옮겨다니며 살게 된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여서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학업을 위해 외국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으며 또 남편의 직장이 정해짐에 따라 아무 연고가 없는 대구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닌 적은 전혀 없었지만 나는 같은 경상도인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부모님이 모두 경북 출신이고 대구에는 외가쪽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대구는 내륙에 위치한 분지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양반마을이 남아있는 경주(양동마을)와 안동(하회마을)이 가까워서 그런지 유교적인 가부장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분위기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딸 하나를 데리고 이사온 나를 보고 생판 모르는 이웃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해주는지 나는 속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내가 첫애를 낳은 뒤 더 이상 애를 못 가지게 된 사람인 양 동정을 하면서 딸 하나로는 안 된다, 경주의 어디가면 대추나 못집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가 용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 거기에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로는 안 된다는 양가 부모님의 걱정과 종용이 더해져서 결국 나는 친정어머니가 데리고 간 부산의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보약을 두 채 지어서 먹고 이듬해 가을에 늦둥이를 낳았다. 한국에서 만며느리로 살면서 평생 부모님의 손주타령을 듣고 사느니 차라리 둘째를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자라면서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오빠들을 통해 보고 느낀 것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지금까지 35년간 생활해 오면서 몸으로 경험하게 된 여성문제는 강렬하고도 심각하였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억압

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오랜 전통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 대구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 “아니, 대구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면 부산여자가 와서 저렇게 오랫동안 대구여성회 회장을 하느냐?”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 부산여자가 바로 나였다. (1991~1994년 그리고 2002~2007년 도합 10년간 회장직을 맡았다).

처음에는 참교육을위한학부모모임을 통해 그리고 대구여성회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동안 겪었던 경험들에 대한 소회를 이 자리를 빌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대구여성회 회원이 되다.

3월 초에 대구에 오자마자 취학통지서가 나온 큰애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내가 부딪친 문제는 학교현장에 아직도 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학급의 비품을 학부모에게 사오라고 공공연히 요구하였고 학모들을 불러서 교실과 유리창 청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우리가 학교다닐 때 있던 나쁜 관행이 한 세대가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인 것, 이걸 좀 문제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진 또래 엄마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참에 참교육을 외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문제가 터졌고 우리는 전교조 교사들이 농성중인 학교로 지원방문을 가기도 하였다. 그때 만난 학부모 중 한 사람이 당시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대구여성회 사무실로 나를 이끌었고, 나를 회원가입 시켜놓은 다음에 자기는 1년간 병가를 내버렸다. 그래서 반년 뒤에 회장없는 부회장을 1년간 맡다가 다음 해인 1991년부터 회장을 맡게 되었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학부모모임은 1989년 9월 전국참교육을위한학부모모임이 결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대구지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대구여성회는 1987년 유월 항쟁의 분위기에 힘입어 1988년 1월에 “주체적인 여성, 평등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에서 창립을 하게 되었다. 군사정권의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와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역량이 만나 가능했던 것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여성, 젊은 주부 그리고 사무직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여성회가 창립된 그해 12월에 접수된 강정순씨의 상담전화는 믿기 어려운 내용으

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분노케 하였다. 우리가 “대현1동 파출소내 경찰관에 의한 여성윤간 사건”으로 이름붙인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오히려 경찰관 무고혐의와 간통혐의로 6개월간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항소심에서 무고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보상은 받지 못한 채 199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서 첫 TV인터뷰를 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해 12월 초에 대구의 문옥주 할머니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서울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신고를 하였다. 이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시청과 군청에 피해자 센터와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구여성회도 나서서 피해자 신고전화를 유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자료로 보내었고, 일찌감치 피해자 신고를 하신 문옥주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1992년 4월 대구여성회에서 대구YWCA와 공동주최로 “정신대 문제의 실태와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강사는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지문 날인 반대운동을 해오신 최창화 목사와 문옥주 할머니였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여러 피해국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고자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가 1992년 8월 서울에서 열렸고,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홍콩 등 6개국이 참가하였다.

제2차 강제종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1993년 10월 일본 사이타마현의 국립교육부인회관에서 열렸다. 거기에 참석한 나는 일본 전국에서 참가한 여러 단체들의 부스와 안내팸플릿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내 저금 내나라>라는 한글 제목이 선명한 A4용지 크기의 책자가 눈에 띄어서였는데 그것은 ‘문옥주씨의 군사우편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모임’이 펴낸 그 동안의 활동자료집이었다. 그 부스에서 그 모임의 멤버이기도 하였던 모리카와 마치코씨를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모리카와씨는 위안부는 일본 군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민간인 업자들이 모집하여 군대를 따라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편지를 써서 한국의 피해자를 직접 초

청하여 증언을 듣는 행사를 벌였고, 그래서 만나게 된 문옥주 할머니가 전쟁 당시 버마(지금은 미얀마)에서 군사우편저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저금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일대기를 쓰기로 허락을 받고 대구의 할머니 자택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모리카와씨가 대구에 오실 때마다 할머니의 인터뷰를 도와드리게 되었고, 그와의 만남은 이후 그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모리카와씨는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증언을 바탕으로 버마 현지에 가서 답사와 자료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수소문하여 증언을 듣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 군대의 이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뒤지기도 하였다. 랑군 시내에 조선 여성들이 있었던 아사히 위안소의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진을 책에 싣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1996년 초에 일본에서 펴낸 책이 『문옥주, 버마 전선 다테사단의 ‘위안부’였던 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할머니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한국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이 문제의 해결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모리카와씨를 포함한 지원단체와 최창화 목사 등이 참여하여 일본 우정성을 상대로 몇 차례나 교섭을 벌인 결과 창시개명된 후미하라 옥주(文原玉珠)라는 이름으로 된 군사우편저금의 원부를 우여곡절 끝에 발견하였다. 1945년 9월 마지막으로 저금한 이후 1965년까지 해마다 이자가 붙어서 원리합계가 50,108엔이었다. 하지만 반 세기 가까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던 할머니의 개인자산인 그 저금은 결국 찾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우편국 측이 1965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관련 경제협정에 따라 개인 저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모리카와씨에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할머니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운 상태를 겪다가 무작정 소형 비디오



(사진제공: 안이정선)

카메라를 메고 미얀마로 다시 떠났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장기간 버마에 체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전쟁 당시 일본군의 통역병으로 일했던 현지인을 만나 인터뷰하기도 하고 전후에 버마에 남은 전 일본군 병사를 만나 취재를 하기도 하였다. 문옥주 할머니가 자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사진제공: 타임캡슐)
기 애인으로 모리카와씨와 인터뷰할 때 '우리 혼다 미네오'라고 하였던 그 군인의 생사를 몰랐기 때문에 모리카와씨가 책을 낼 때는 야마다 이치로라는 가명을 썼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후에 버마의 어느 사원에 보관돼 있던 일본군 전사자 명부에서 혼다 미네오의 사망기록을 확인해 낸 것도 모리카와씨였다. 2013년 국내의 사설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옥주 할머니의 비상한 기억력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모리카와씨의 책에 1942년 7월 10일에 큰 배를 타고 부산항을 떠났다는 할머니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 사실이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사후에 모리카와씨가 버마 현지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보태어 2015년에 자신의 책의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2005년 8월에 정신대시민모임이 모리카와씨의 책을 번역하여 역사의 증언 두 번째 이야기로 펴내었는데, 한국어판 제목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였다.

3.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탄생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던 해로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열렸다. 대구여성회에서는 연초에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를 결성하고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과 함께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였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신과 명절을 챙기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하기도 하였다.

8월에는 대구정신대할머니 돕기 바자회를 동아쇼핑에서 열었으며 동아백화점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렇게 모은 수익금으로 대구시에 피해자로 등록하신 십여 분께 100만원씩의 성금과 광병원의 평생무료진료권을 전달해 드렸다.

당시에 약값과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된다는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의료후원단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한의원을 비롯하여 내과와 치과 등을 섭외하다가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곳이 광병원이었다. 당시 제1내과 과장이었던 광동협 현 원장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하시며 평생무료진료권을 만들어주셨다. 그 이후로 대구경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누구나 지금까지 감기치료에서부터 입원과 수술, 장례식까지 광병원에서 전적인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광병원과 함께 당시 의료후원단 구성에 협력해 주셨던 곳은 성심복지의원, 김만제 내과, 신피부비뇨과, 박현탁치과, 자매가정의학과, 경희한의원, 동양당한의원 등이었다.

1996년 10월 26일 새벽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문옥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대구여성회 정대위에서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할머니의 빈소를 차리고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할머니가 생전에 마련해 두었던 칠곡의 학명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정대위에서 이후 5년간의 묘지관리비(231,000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767,800원을 할머니의 양아들의 이름으로, 당시 주간지 한겨레21과 함께 정신대할머니 돕기 온겨레 캠페인을 벌여온 “강제연행 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에 기부하였다.

이후 MBC PD수첩에서 문옥주 할머니의 삶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모리카와씨를 꼭 인터뷰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여 모리카와씨가 후쿠오카에서 김포공항으로 날아오셨고 여의도의 MBC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하였다. 할머니의 장례식 모습을 포함하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여섯 살 분홍 치마저고리”라는 제목의 PD 수첩이 11월 5일 전국에 방영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정대위의 행사에 다양한 단체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할머니택을 방문할 때 같이 가고 싶다는 요청이 여성회로 오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구여성회 안의 정대위가 아니

라 대구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동안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서 1997년 12월 29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을 창립하게 되었다.

대구여성회 안의 한 위원회의 활동이 모태가 되어 지역에 새로운 전문영역의 단체가 하나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와는 또 다르게 국가에 의한 전시성폭력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주제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과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운동을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4. 기록과 기억 그리고 연대활동

1) 생존자들의 일대기 발간-- 역사의 증언 시리즈로 우리 시민모임에서 지원하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서 다섯 분의 일대기를 발간하였다.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훈 할머니, 2004년)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문옥주 할머니, 2005년)

『가고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 가고』 (조윤옥 할머니, 2007년)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 (김순악 할머니, 2008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박을라꼬』 (김옥선 할머니, 2009년)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과거사청산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서명전, 국회의원 면담, 제정촉구를 위한 국토순례, 8·15기념 집회 등

*전 일본 병사 쿠보타 테츠지씨 초청, 증언 강연회 개최(2001. 11)

*한일협정문서 공개소송 승소 판결(2005.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 의회 결의안 채택(2009.7)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2006.7→ 2011년 8월 승소 판결)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 걷기대회(2010년부터 2016년까지 7회 실시)



영혼의 돌 안치식 (사진제공: 정신대시민모임)



관부재판 항소심 참관 교류회 (사진제공: 정신대 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해원 진혼굿(2014.5)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공동행동 행사

*희움 대학생 써포터즈 모집, 활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시민강좌

*할머니와 함께하는 지리산 문화기행(2001 & 2002)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매년 6월 6일) - 할머니들 산소 방문

*한일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대구행동 결성 및 서명 운동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 및 국제연대위원회 회의와 행사 참석

3) 국내외 연대활동

지역의 여성인권단체들과 국내외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단체들과의 교류와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후쿠야마 연락회와 연대- 히로시마고등재판소 관부재판 항소심 방청 및 보고대회 참가(1999)

*일본역사교과서 불채택·재검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발족 및 활동, 히로시마 항의 방문(2001)

*히로시마 교직원 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초청, 천안 망향의 동산 고보댐 징용피해자 위령제 및 사죄비 건립식 참석



쿠보타 테츠지 증언 강연회 (사진제공: 정신대시민모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정신대 시민모임)

-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참가(2000)
-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동 세미나 개최
- *이라크 파병반대 촛불 한마당 공동 진행
- *오카나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영혼의 돌’ 안치식(영천 은혜사, 2005)
- *일본 후쇼샤출판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규탄 및 채택저지를 위한 대구시민단체 활동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평양대회 참석(2005), 필리핀 대회 참석(2006)
- *동북아평화를 위한 2004 한일평화 공동행동 실시
- *한일동시다발 증언집회 히로시마 강연회
- *한일청년 평화인권캠프, 히로시마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후쿠야마 연락회 (사진제공: 정신대시민모임)

*동티모르 피해자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방문(2017)

*제1회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회의 참석(2017)

5. 브랜드 희움과 희움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1) 희망을 모아 꽃을 피우다 - 희움(Heeum)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 원예치료사와 함께 진행하는 압화만들기였다. 2003년부터 원예치료사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댁을 방문하여 같이 꽃병에 꽃을 꽂기도 하고 화분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직접 꽃잎과 이파리를 따서 책속에 끼워 눌러서 말리게 되었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듬해부터 압화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작은 열쇠고리부터 손거울과 크고 작은 액자 등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교회와 교보문고, 대구백화점에서 몇 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다 시민모임에서 자신의 이름쓰기를 열심히 연습하여 작품에 겨우 싸인을 남긴 할머니 작가들의 작품을 사진찍어서 화보를 남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화보를 보고 고려대학교 경영대의 학생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할머니들 압화 작품이 아주 멋있던데 이것을 디자인하여 상품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블루밍 프로젝트 팀과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된 것이 희움(Heeum)이라는 브랜드였다. ‘희망을 모아 꽃피움’에서 첫글자와 끝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그 뜻을 영어로 옮겨서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 라는 문구도 만들었다. 첫 작품은 할머니들의 압화 작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실리콘 팔찌였다. 영어문구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이라는 한글문구가 들어간 팔찌였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압화 작품이 인쇄된 에코백과 손수건, 노트, 파우치, 티셔츠 등의 일상제품들이 뒤이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늘 재정문제로 힘들었던 NGO에게 재정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팔찌가 희움 팔찌, 위안부 팔찌, 의식 팔찌 등으로 알려지며 제법 팔리기 시작하여 때마침 시작한 위안부역사관 건립이 큰 힘을 받기 시작하였다.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사진제공: 안이정선)

희움의 상품들은 2010년에 돌아가신 김순악 할머니, 심달연 할머니 두 분의 압화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어둡고 무거운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소비하는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브랜드 희움은 일본군 ‘위안부’ 이슈의 효과적인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대시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재건축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고 <희움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다. 2015년 12월 5일 개관 당시에 헤아려 보니 희움 제품을 구매해 준 국내외의 희우머가 15만 명에 달하였다.

2) 희움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구성과 기획전시들

*상설전시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역사에 대한 내용과 할머니들의 증언 패널,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이 제작한 위안소 지도와 대구경북의 피해자들이 있었던 위안소의 알림표시, 문옥주 할머니의 사례 소개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해결운동 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음.

*영상교육실 :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관련 다큐를 편집하여 상영.

*수장고 : 할머니들의 유품, 일본군 ‘위안부’ 제도 관련 각종 자료들, 문서와 테이프, 압화 작품들 등을 관리, 보관하고 있음.

*기획전시실(2층) : 개관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활동해 오며 시민모

임과 연대해 온 개인과 단체들을 소개하는 전시(‘해방 70년, 한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평화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며, 할머니들의 생전모습과 유품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공간 회음 : 1층 상설전시실의 지붕으로 마당을 만들어 간단한 전시나 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와 조명장치도 설치함.(회음여름콘서트 2017.5.27.)

*다목적실 : 역사관 운영담당자들의 사무실 공간과 함께 회의실, 역사관의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 동안 2층의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어 온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1, 옥주씨(2016년 11월 26일~11월 30일)

*아시아의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 동티모르(2017년 8월 10일~10월 30일)

*그리는 마음(2018년 5월 23일~8월 11일)

*그녀들의 용기, 우리들의 #WITH_YOU:(2018년 8월 14일~11월 30일)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2 김순악(2019년 8월 13일~ 2020년 8월 8일)

그리고 2018년에 압화 체험 프로그램 <꽃마중>을 정기(54명 참여)와 비정기(165명 참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대구광역시 역사기록 기념사업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연극 “할매의 방” 을 지역의 극단과 함께 제작하여 공연하였고, 박문철 감독이 김순악 할머니의 다큐멘터리 “보드랍게” 를 제작하여 8월 14일에 시사회를 가진 바 있다.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음, 전국 개봉은 2022년 2월 23일)

3)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참여- 김순악 할머니의 유산 기탁과 이용수, 이수산 할머니의 참여

② 그림책 <꽃할머니> 권윤덕 작가의 인세 기부- 고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출판한 그림책

③ 일반 기부금 및 전시회, 공연 수익금

-대구지역 작가들의 전시회를 통한 작품판매 수익금 기부

-버스킹 밴드의 월1회 정기 거리공연을 통한 역사관 건립홍보 및 모금

-대구시립무용단원 (송경찬, 김분선)의 정기 거리공연을 통한 역사관 건립홍보 및 모금

-다큐 <그리고 싶은 것>(‘꽃할머니’ 그림책의 제작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 수익금 기부

-고교 연극 동아리 대회 수상금, 축구대회 수상금 등 기부

-청소년 건립기금 마련 캠페인 “우리가 기억할게요”를 학교 단위로 진행

④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캠페인

2013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대구시내 중심가에서 캠페인을 진행함.

각 학교 역사동아리, 반크, 싱요사 등 봉사동아리, 각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청소년단체가 돌아가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시, 역사관과 관련된 홍보 및 희움상품 판매를 하여 건립기금 모금활동을 하였음.

⑤ 브랜드 희움의 상품판매 수익금-

전국의 중고교,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소모임 등에서 희움상품 공동구매가 활발히 진행됨

6. 언제나 뒷북치는 정부와 지자체

1) 부지 확보 과정에서 확인한 관의 태도

정신대시민모임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을 통해 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기념관 건립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간단체 기념관 건립은 민간단체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2년 10월에 답변으로 받고는 관의 지원에 대해 단념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 중에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직접 찾아가 만난 적도 있는데 대구시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너무나 열변을 토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의 하소연을 실컷 들어주다가 면담이 끝났다. 그 뒤 2013년 1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역사관 건립 예산지원이 결정되자 이번에는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결과 따내기 위해 대구시에서 서울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만큼 매칭펀드로 대구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전에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안 쓰는 공간을 대여해 주면 위안부역사관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팔공산 자락의 폐교된 해서초교를 추

천하였다. 하지만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그곳으로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그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자 알아보니 단체 대표 명의로는 안 되고 법인 이름으로는 가하다고 하여 법인등록까지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맞추어 가동되기 시작한 브랜드 희움의 수익창출에 힘입어 2013년 7월 1차로 역사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게 되었다(약 31평)

2)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젊은 여성들이 어디에서 언제 몇 명이나 군대위안부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해방 뒤에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왔는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그저 5만~12만 명, 또는 7만~20만 명이라는 폭넓은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을 당시에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윤정옥 선생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2년 1월 한국정부는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조사작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992년 7월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정부가 1992년 7월에 발표한 1차 조사보고서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위안부 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그리고 위안부 모집에 관여하였던 한국인들의 양태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후 한국 정부는 다른 조사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 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

정부는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2018년부터 8월 14일을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2012년 12월 제11차 모임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커밍아웃한 이 날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2013년 8월부터 각종 기념행사들을 해오고 있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피고로 하는 한일협정문서공개 100인 소송, 2006년 7월에 시작하여 5년의 노력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헌법소원심판창구 등은 모두 시민단체의 지난한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의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는 그 해석상의 분쟁을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해결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승소판결이 나온 뒤에도 우리 정부는 전혀 그 위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2015년의 한일합의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일본 정부의 안을 수용하고 그것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데에 합의 해주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7. 피해자 중심주의의 명암

1) 단체의 운영과 회원 모집

창립 초기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회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사무실이 굴러가고 상근활동가들에게 제때에 활동비라도 줄 수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회원은 물론이고 후원회원을 폭넓게 모으는 노력도 필요해진다. 정신대시민모임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입회원서를 들고 다니며 후원회원 모집에 열심이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한 시절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시고 다니며 증언집회를 열기도 하였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하여 인삿말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읽을거리나 전시물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가 하는 한마

디 말을 듣고 피해자 할머니의 손 한번 잡아보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았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후원회원 모집이 잘 된다는 얘기를 신나서 하던 어느 윤영위원의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을 앞에 내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미 녹음해 둔 증언이나 영상, 글로 정리해 둔 것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 궁금하면 그런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말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었다. 피해자 스스로 새로운 경험들을 자기식으로 소화해 가며 사회화되면서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그를 높이 모시는 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 주의일까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피해자를 사사건건 앞세우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가는 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평소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인다.

2020년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번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이 땅바닥에 여지없이 처박히는 걸 느끼면서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동안 우리가,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질러온 잘못이 참으로 크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정책 과정 연구

츠치노 미즈호

(메이세이대학 준교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Asian Women's Fund: AWF) 정책 과정 연구

츠치노 미즈호

mizuho.tsuchino@meisei-u.ac.jp

메이세이대학 교육학부

목 차

- 01 AWF를 연구한다는 것
- 02 AWF 정책 과정 분석
- 03 향후의 연구에 대하여

이 발표의 바탕이 된 논문

「위안부」문제와「보상(속죄)」의 정치학 :
아시아 여성기금의「보상사업」에 착목하여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太平洋センター『アジア
太平洋レビュー』(9) : 73-87, 2012年)

<https://keiho.repo.nii.ac.jp/records/584>



3

01

AWF를 연구한다는 것

4

(1) 연구 계기

- ◆ 지도교수의 권유 “AWF에 대해 연구해 보면 어떨겠나?”

→ 2005년 당시, AWF 관련 선행연구는 없었음.

- ◆ AWF에 대한 당시 나의 생각

- ✓ 「생존자를 모욕하는 것」
- ✓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

→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AWF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한국인 ‘위안부’ 생존자들
(AWF HP에서 <https://www.awf.or.jp/3/korea.html> 2023.8.9검색)

5

(2) AWF를 둘러싼 논의

- ◆ 기금에 대한 비판적 평가

- ✓ 아시아 여성기금이 생존자들 사이에 ‘균열과 의심’(中野2008:13), ‘갈등과 불신’(鄭著・中野訳2008:60) 을 낳음
- ✓ 기금 사업은 ‘일관성이 없고, 각 나라마다 제각각인 데다가 차별적이기도 함’ (金英姬2002:9)
- ✓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운동을 망가트리기 위한 돈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尹貞玉、聞き手・金英姬1997:34)
- ✓ ‘다양한 피해자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대만에서는 국민기금이 “국가 책임이 애매”하다며 받기를 거부한 피해자가 많았다.’ (金富子 2013: 75)

6

(3) AWF을 둘러싼 소박한 의문

- ◆ 왜 일본정부는 AWF를 발족시켰나?
- ◆ 왜 일관성 없는 '속죄사업'이 입안되었나?
- ◆ AWF의 '속죄사업' 수급자가 364명 (한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에 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 ◆ 왜 AWF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나?
- ◆ 'AWF는 실패했다'로 끝내도 좋을까?

→ '속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 생존자의 '존엄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7

(4) AWF를 연구하는데 어려운 점

- ◆ 생존자와 운동관계자들에게 분열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
→ 인터뷰 조사가 어려움
- ◆ AWF를 연구한다 =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국민기금파'라고 함.
→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이항대립적 도식이 되어버림.
- ◆ AWF를 연구한다 = 'AWF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기대함.
→ 옳고 그름을 둘러싼 평가에 머물지 않는 연구를 개척하기 어려움

8

(5) AWF연구의 중요성

◆ 정말 연구가치가 없나?

"1995년 이라는 정치적 기회의 도래와 운동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밖에 아웃풋을 이끌어낼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문제점과 모순, 한계, 혹은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일본 사회의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줄고, p.86).

→일본인 연구자로서의 책임

9

02

AWF의 정책 과정 분석

10

표1 '속죄사업'각국별 사업 실시와 사업 결과 일람

대상국	신청접수 실시기간	사 업 내 용	사업결과
필리핀	1996.8.13~ 2001.8.12	1)'속죄금'(200만엔) 2)의료-복지지원사업(120만엔 규모) 3)총리-이사장의'사죄 편지'	3개국 285명
한국	1997.1.11~ 2002.5.1	1)'속죄금'(200만엔) 2)의료-복지지원사업(300만엔 규모) 3)총리-이사장의'사죄 편지'	
대만	1997.5.2~ 2002.5.1	1)'속죄금'(200만엔) 2)의료-복지지원사업(12만엔 규모) 3)총리-이사장의'사죄 편지'	
네덜란드	1998.7.15~ 2001.7.14	1)의료-복지분야 재원 및 서비스 제공(2억 5500만엔 제공) 2) 하시모토 총리가 네덜란드의 꼭 총리에게 보낸 편지 사 본	79명
인도네시아	1997.3.25~ 2007.3	1) 고령자 사회복지 추진 사업(3억 8천만엔 규모)	· 61시설 건설 · 8시설에 대하 여 비용 지급 및 수리

出典:インドネシア社会省福祉厚生総局「インドネシア政府とアジア女性基金の協力による慰安婦問題への取り組みの報告」2006年、
3ページ (『デジタル記念館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http://www.awf.or.jp/index.html> 2012年6月14日閲覧) ; 財団
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2007年、23～48ページより筆者作成。

11

(1) 문제 의식

- ◆ 생존자에 대한 '속죄'를 둘러싸고 어떠한 정치학이 전개되어왔는지를 AWF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 ✓ AWF는 왜 발족했나?
 - ✓ '속죄사업'은 어떻게 성립했나?
 - ✓ '속죄사업'을 수급한 생존자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 박사논문으로 정리함(2014년 3월, 오차노미즈대학)

12

(2) 분석틀(줄고 2012)

◆ 정책과정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①과제 설정, ②정책입안, ③정책 결정, ④정책실시, ⑤ 정책 평가 등 5개로 나누어 분석함.

◆ 주목한 과정

④정책 실시 과정

13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AWF 발행 자료를 비롯한 관련 문헌

◆ 인터뷰 조사

AWF 전 이사, 사무국 직원, 외무 관료, 운동 관계자

14

(4) 분석 결과

- AWF '숙죄사업'을 둘러싼 공방
- ◆ AWF와 일본정부는 한 몸이 아니었음.
- ✓ 일본 정부가 발족시키고, 내각부 소관의 재단법인이 되었음.
- ✓ 그러나 사업 내용은 기금의 발기인, 이사, 운영심의회 위원, 전무이사・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등이 구체화했음.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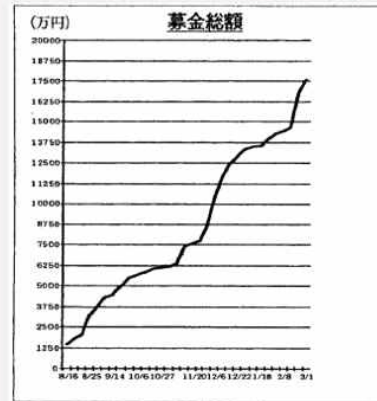
- ✓ 일부 시민운동이 '비판적 관여'(中嶋2007:151) 혹은 '감시한다'(臼杵1998:62)는 입장에서 이사와 사무국 직원으로 참가
- ‘내각관방의 외교심의실(外政審議室) 사람들과 심하게 언쟁을 펼치다가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中嶋2007:154)
- ✓ AWF관계자는 수급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었음.
- AWF관계자는 일본 정부・관료와 다른 이해와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한 행위자였다고 할 수 있음.

(AWF HP에서
<https://www.awf.or.jp/2/foundation-01.html> 2023.8.9검색)



16

그래프1 '속죄금' 모금 총액 추이
(1995년8월16일~1996년3월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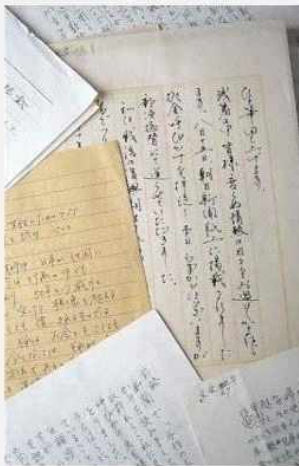


出典：財団法人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アジア女性基金ニュース」 No.5、1996年2月1日、1ページ。

- ◆ '전국민적 속죄'는 아니었음
- ✓ 일본정부는 모금액을 피해자수로 나누는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음.
- ✓ 일본 국민에게 모은 모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속죄금' :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중앙·지방의 관리직, 다음은 노동조합, 그리고 일본 국민 개인의 모금 순(전 AWF운영심의회 위원 Y 씨2012.3.26). 각료에 대한 모금은 강제였음.(전 외무 관료 S 씨2009.12.21)

17

'속죄금' 을 모금할 때 일본 국민으로부터 온 편지와 메시지



'속죄금'을 모금할 때 편지를 동봉하거나 계좌이체 용지에 메시지를 써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이 편지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급자에게 보냈다(AWF HP에서 <https://www.awf.or.jp/3/donators.html> 2023.8.9 검색)

18

- ✓ 모(某) 경제단체: '이제 옛날 얘기 아니냐? 좀 봐줘라'
 - ✓ 모금을 예금할 예정이었던 모 (某) 은행: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예금 거부
 - ✓ 당초 일본정부가 사업 담당자로 생각했던 일본 적십자사: '황후님이 명예총재인 적십자로서, 그런 일은 맡을 수 없다'며 거부(이상, 전 외무관료 S 씨2009.12.21)
- '매춘부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 '애초에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인식을 알수 있음.



일본 적십자사 HP에서
(https://www.jrc.or.jp/about/organization_summary/ 2023.8.9 검색)

19

- ◆ 그렇지만 AWF에 희망을 건 관계자들
- ✓ '무라야마 내각 이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내각이 앞으로 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 ✓ 아시아 여성기금에 협력하여, '기금의 내용을 제대로 다시 만들'거나(臼杵1998:48-77), AWF를 '개인 보상 단계'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土野 2011:335)



1994년6월에 발족한
사민당(당시)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한
연립정권

20

◆ '보상사업' 정책 실시 과정 = 기금측과 운동단체와의 대립 과정

- ✓ 기금 발족 후, 여성 운동이 중심이 되어 기금을 망가트리기 위한 운동이 개시되었음.
- ✓ 운동단체의 항의·제안은 AWF이사회에서 종종 다루어졌으며, 기금은 운동단체의 동향을 주시했음.

'한국의 대일 논조·분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처리를 '마무리'하고, '진상규명' '교훈화·철저한 교육' '보상' 등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 불신이 크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제 3회 이사회」회의록, 1996년2월)

21

◆ AWF를 둘러싼 대립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수정주의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온 일본 정부

- ✓ 일본 정부는 자금만
- ✓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1997)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1997) 발족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줄어 갔음



22

□ '속죄 사업'과 수급자(인도네시아 제외)

◆ 네덜란드: 사업보고서는 수급자의 목소리를 거의 다루지 않고, '총리 편지'의 의의를 소개.

→ 국가 최고 지도자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승인의 필요성



총리의 '사죄 편지'
(AWF HP에서
<https://www.awf.or.jp/2/foundation-03.html> 2023.8.9 검색)

23

◆ 필리핀: 사업 보고서에서는 98명의 수급자와 인터뷰. 생활 개선과 인간 관계 변화 등의 사례를 소개.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 '아이들 돌봄' 등.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되찾는 수단. 혹은 가족에게 '약점'?

◆ 대만 : 사업 보고서 없음. '나는 이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며 기금관계자의 방문을 기다리는 생존자도(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 ' 제93회 이사회·제74회 운영심의회' 2007.2.2.).

◆ 한국: 사업 보고서 없음.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속죄사업'을 수급한 생존자도(花房2012:45)

◎ **각국 수급자의 '속죄사업'에 대한 의미는 다양함. 그 배후에 있는 것은?**

24

표2 필리핀과 한국 생존자의 상황 차이

	필리핀	한국
생존자의 속성	수급자의 3분의 2가 기초교육을 받음 *1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량 창출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5
피해 발생시의 상황	'침략지'에서 산발/연속적으로 일어난 강간*2	'식민지'에서 '일본인'으로서 '위안부'로
'위안소'로부터의 귀환	해외로 연행된 사례는 없다*3	도보와 배, 기차로 귀국/ 연행지에 머물 수 밖에 없음
전후 가족 및 혼인 관계	'속죄 사업' 수급자의 67%가 가족과 생활*4	19명 중 6명이 결혼에 실패, 5명이 미혼, 15명이 혼자 생활(1993년 조사)*6
전쟁 범죄로서의 인정	도쿄 재판에서 필리핀에 대한 전쟁범죄를 엄중히 추궁	대한민국·대만은 도쿄재판 심리 대상에서 제외

◎ 생존자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정부·사회로부터의 지원, 가족관계, 규범성 등이 '속죄 사업'의 의미를 다르게 함.

→ **획일적인 '속죄'는 곤란, 국가의 대응 외에 주위 사람들의 세심한 지원의 중요성**

25

□ 결론

1.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대응조치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나?

정치·사회적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상처 치유가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는 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모순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생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2.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

생존자 개인이 받은 피해를 일본의 국가적 폭력이라는 광범위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

26

03

향후 연구에 대하여

27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향후 연구

✓ 많은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

✓ 일본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워짐.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실증연구, 운동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 것이 점점 중요해짐(AWF 검증 포함)

28



한국인 '위안부' 생존자와 지원자들 (勝山泰佑氏 촬영・제공)

(젠더에만 주목한다고) '폭력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강간 피해를 참으며 분쟁 후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여성들이 취해 온 다양한 전략을 이해할 수 없다' (Skjelsbæk [2012]: p.46)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운동의 축적을 이용하여, '생존자는 전후 생활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나?' '생존자의 '존엄의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국제비교하면서 현재 연구 중임.

◆ 参考文献

- 白杵敬子・天野恵一・岡真理1998「『慰安婦』被害者の尊厳と人権——ハッキリ会の立場から」『インパクション』107: 48-77.
- 金英姬2002「国民基金の『償い事業』とは何だったのか」『戦争責任研究』38: 8-17.
- 金富子2013「『国民基金』の失敗——日本政府の法的責任と植民地主義」『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編、西野瑠美子・金富子・小野沢あかね責任編集『「慰安婦」パッシングを超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大月書店、68-85.
- 鄭鉉栢著・中野宣子訳2008「国民基金と被害者の声」金富子・中野敏男編『歴史と責任——「慰安婦」問題と1990年代』青弓社、53-64.
- 土野瑞穂2010「『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の政策過程に関する一考察——アクター分析を中心に」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創成科学研究科『人間文化創成科学研究論叢』13: 329-338.
- 中嶋滋2007「被害者の気持ちに向き合う」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オーラルヒストリー アジア女性基金、150-156.
- 中野敏男2008「日本軍『慰安婦』問題と歴史への責任——本書の認識と課題」金富子・中野敏男編、2008、『歴史と責任——「慰安婦」問題と1990年代』青弓社、12-32.
- 花房恵美子2012「関釜裁判を支援して——原告ハルモニたちとの20年を振り返って」志水紀代子・山下英愛編『シンポジウム記録「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て——開かれた議論のために』現代書館、35-51.
- 尹貞玉、聞き手・金英姬1997「韓国・挺対協の尹貞玉さんに聞く『日本政府は本当の謝罪を』」『週刊金曜日』190: 34-35.
- Skjelsbæk, Inger. [2012], The Political Psychology of War Rape: Studies from Bosnia and Herzegovina, New York: Routledge.

◆ 表2の参考文献

- * 1 国立フィリピン大学ロスバニョス校・公共部門における戦略的計画・政策問題研究所2002「危機的状況に置かれたロラたちへの支援, An Evaluative Researc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ssistance to Lolas in Crisis Situation: ALCS, 事業に関する評価的研究—フィリピン社会福祉開発省および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Asian Women's Fund: AWF による共同事業について」デジタル記念館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2012年6月13日取得, <http://www.awf.or.jp/6/statement-29.html>）、p.14.
- * 2 吉見義明監修、内海愛子・高橋茂人・宇田川幸大・土野瑞穂編2011『東京裁判——性暴力関係資料』現代史料出版、p.20／VAWW-NET Japan編2002b『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第6巻 女性国際戦犯法廷の全記録Ⅱ』緑風出版、p.50.
- * 3 台湾の元「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FIFTY YEARS OF SILENCE 50年間の沈黙』第4号、2000.5.25、p.18
- * 4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ニュース』No.7、1996.8.30、pp.15, 27.
- * 5 金富子2005、『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就学・不就学をめぐる権力関係』世織書房、pp.206-207.
- * 6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1993『証言——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明石書店、pp.35-36.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2000년 여성법정’의 성과와 경험을 말한다

이케다 에리코

(wam 전 관장)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성과와 경험을 말한다.

이케다 에리코

wam 전 판장

1. 가해국인 일본의 여성이 제안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지금은 결코 낯설지 않은 ‘전시 성폭력’, ‘책임자 처벌’, ‘성노예제’, ‘인민재판’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했던 1990년대 말, 이를 ‘위안부’ 문제와 연결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사히 신문 기자이자 여성운동가인 마츠이 야요리 씨(松井やより, 1934~2002)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는 일본 법원이 책임자 처벌이나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해국인 일본의 여성으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다가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를 심판하는 민중법정을 생각하게 됐어요”라고 마츠이 씨는 말했다. 이 생각을 동료들에게 전하자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던 일본 여성들이 하나둘씩 동의를 표했다. 처음에는 황당무계한 제안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깊은 엄청난 구상이어서 기대가 컸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은 아시아 전역에 위안소를 설치했지만 엄격한 검열을 통해 보도를 금지하고 패전 시에는 관련 자료 소각을 명령하며 ‘위안부’ 제도를 은폐했다. 전후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에 증거도 제출되어 BC급 전범 재판에서는 일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여성들의 피해는 다루어지지 않아 일본의 국가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가 전시 성폭력으로 밝혀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의 피해 여성들이 들고일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10건의 재판 중 8건이 사실인정을 받았지만, 국가무답책과 제척기간, 양국 간 평화조약 등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만다. ‘위안부’ 재판 지지자들은 연이은 패소로 슬픔에 잠긴 피해 여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

엇인지를 모색했다.

마츠이 씨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일본 남성의 기생관광, 80년대에는 ‘위안부’ 문제 등을 취재했다. 그는 93년 6월 유엔 세계인권회의(비엔나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호소에 충격을 받아 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NGO포럼에서 전시 성폭력 워크숍에 참여하고, 97년 10월에는 전시 성폭력 책임자 처벌을 주제로 ‘전쟁과 무력 분쟁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각국 여성들이 연대하는 ‘VAWW-NET’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98년 6월에는 ‘VAWW - NET 재팬’을 발족하게 된다.

마츠이 씨가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이하, 여성법정’)을 구상할 때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은, 94년 2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강덕경 할머니 등 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소송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날이다. 도쿄지검이 고소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접수하지 않자 분노에 휩싸인 강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밝히고 사과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마츠이 씨가 ‘여성 법정’을 이야기할 때 “이게 내 등을 떠밀어 줬어”라고 하며 자주 보여준 것은 강 할머니가 말년에 그린 그림 ‘책임자를 처벌하라!’였다. 그것은 눈을 가리고 나무에 묶인 일본 군인(쇼와천황)이 처형당하는 그림으로,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은 조의를 표하는 흰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들이었다.

전시 성폭력의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일본과 피해국 여성들이 연대하여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를 심판하는 민중 법정을 열자는 마츠이 씨의 제안은 각국의 피해 여성과 지원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98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무력 분쟁과 여성’ NGO포럼에서도,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도 동의를 얻어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 ‘여성법정’ 준비단계에서 직면한 문제들

‘여성법정’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98년에는 국제준비회의와 VAWW-NET이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과 피해 6개국(이후 8개국)

에 국제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제적인 여성인권운동가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도 결성했으며, 각국 검사단은 각국별 기소장 작성에 착수했다.

‘여성법정’의 실질적인 사무국을 담당할 일본의 국제실행위원회는 여성운동과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민중 법정’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전쟁범죄를 재판한 1967년 민중 법정인 ‘러셀 법정’에서 힌트를 얻었다. 법조인과 역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현장’ 작성과 전문가 증인 선정, 일본뿐 아니라 각국의 기소장 작성을 위한 조사 및 자료 수집에도 힘썼다. 일본 정부가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를 맡을 변호사도 정해야 했다. 마츠이 씨는 수석검사, 판사단, 법률고문 선정과 국제 협상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실행위원회 조사팀 영상반은 말레이시아, 북한 등 일본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피해 여성들의 영상 증언을 사전 녹화하고, 법정에서 가해 증언을 할 전 일본 군인을 찾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전직 군인들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웠다. 결국 ‘중국 귀환자 연학회’(이하 ‘중귀련’)의 전직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귀련’은 일본의 패전으로 시베리아에 억류된 후 중국 푸순(撫順)과 타이위안(太原) 전범 관리소에 ‘전범’으로 수용되었던 전 일본병사들의 단체다. 그들은 전범관리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고, 결국 자신의 죄상을 모두 자백했던 사람들이다. 영상팀에서는 ‘중귀련’의 기관지와 증언집을 읽은 후, 장시간 면담을 거쳐 당시 일본 병사 출신 두 명에게 법정에서의 가해 증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실행위원들 모두가 먹고 자는 것도, 본업도 잊을 정도로 준비작업에 몰두하며 ‘여성 법정’을 맞이했다.

준비단계에서 일본 실행위원회와 검사단이 직면한 문제는 수없이 많았지만, 각국과의 견해차가 드러날 때는 서로가 납득할 때까지 토론을 거듭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웠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민중 법정은 ‘모의 재판’이 아니다

피해국 중에는 ‘민중법정’을 단순한 ‘민중의 정치 집회’, ‘모의 재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일본 실행위원회와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실제 형사재판에 가까운 심리를 하기’로 합의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인 피해 여성들이 끌려간 부대와 책임자,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완벽한 기소장을 작성해야 했다. 일본측은 그 증거 수집 작업에 최선을 다해 힘을 쏟아야 했다.

(2) 책임자 처벌과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전쟁 후 스스로 전쟁범죄를 심판하지 않은 일본은 ‘책임자 처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가원수이자 일본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 히로히토는 도쿄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A급 전범으로 분류된 군의 고위층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으며, 그 중에는 기시 노부스케처럼 총리가 된 사람까지 있었다. 언론이나 여론도 ‘책임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위안부’ 지원 운동에서도 이 문제는 중심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꼭 필요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은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검사와 판사들은 천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황의 책임을 묻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실행위원회는 ‘H(천황)팀’을 꾸려 학습 모임을 가지면서 대일본제국의 군대와 정치에서 천황이 한 역할을 알리기 위해 영어로 번역된 연구서와 논문을 찾아내어 서구의 검사와 판사들에게 보내 이해를 구했다.

(3) ‘공창’은 ‘위안부’ 피해자인가?

일본인 ‘위안부’ 중에는 ‘공창’이었던 여성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명을 밝히며 나오는 사람이 적어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이 늦었다. 한국에서는 그녀들을 ‘위안부’ 피해자로서 ‘여성 법정’의 원고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피해자를 직업이나 출신으로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성법정’에서는 일본인 ‘위안부’는 증언대에 서지 않았지만, 오키나와의 츠지유타에 있던 우에하라 에이코 씨와 대만의 임대 유곽에 있던 사와타 노리코(가명) 씨의 사례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4) 우익들의 방해 행위를 극복하다

‘여성법정’의 개정이 다가오면서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우익 단체들

이 더 심하게 VAWW-NET 재팬과 마츠이 야요리 씨를 괴롭히고 협박했다. 실행위원들도 신변의 안전을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역의 승강장에서는 가장자리를 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여성법정’이 열리는 장소인 구단회관이 개정 중에 우익의 방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도쿄 시내에 같은 규모의 별도의 장소를 빌리기로 했다. 다행히 장소 변경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익 단체는 가두선전 차량으로 구단회관을 둘러싸고 엄청난 소음의 혐오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3. ‘여성법정’ 대성공! 그러나 일본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 드러나고……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여성법정’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64명의 피해 여성을 포함한 390명이 참가했고, 연일 천 수백 명이 방청했다. 국제 실행위원회 공동대표인 윤정옥(한국), 마츠이 야요리, 인다이 사홀(필리핀)의 ‘개회선언’과 수석 판사의 개회선언, 수석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는 후에 각국 검사단은 기소장을 제시했고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차례로 증언대에 오른 각국의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이 어떻게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 자체를 파괴했는지를 호소했다. 자신의 위안소 및 전장 강간 가해를 증언한 두 명의 전 일본 병사에게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문가 증인은 천황의 책임과 일본의 국가 책임을 논증하며 피고인 30명을 기소했지만, 수석 검사는 쇼와 천황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재판부는 ‘위안부’ 제도를 ‘인도(人道)에 대한 죄’로서 쇼와 천황에게 ‘유죄’, 일본 정부에는 국가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천황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장에서는 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것이 이제야 사라졌다”, “정의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동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무대 위로 뛰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을 영상단은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중계했다. 해외의 언론은 95개사에서 200여 명이 취재하러 왔으며,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48개사에서 105명이 왔지만 보도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단 한 줄도 기사를 쓰지 않았고, 산케이 신문은 비판 기사를 한 번 실는 데 그쳤다. 아시히 신문과 홋카이도 신문만이 천황 유죄 ‘판결’을 헤드라인으로 썼다.

‘여성 법정’ 주최측은 일본 언론의 이런 태도에 낙담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듬해인 2001년 1월 30일 NHK ‘ETV2001’에서 방영된 “시리즈, 전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제2회 ‘전시 성폭력을 묻는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ETV2001’은 ‘여성법정’ 준비단계부터 취재하기 시작해서, 특별히 심리 과정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성법정’의 공소장도 판결문도 모두 삭제했고, 피해 증언은 극히 일부만 실었으며 가해자증언은 아예 실지 않았다. 대신 우파 학자가 ‘여성법정’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방하는 등 이상한 내용뿐이었다. VAWW NET 재팬은 이 참담한 프로그램으로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NHK와 계열사를 제소했다. 게다가 도쿄고등법원 판결 직전인 2005년 1월, 프로그램 데스크였던 NHK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아베 신조 의원 등이 NHK 고위층을 불러들여 정치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 했다. 도쿄고등법원에서는 증인 심문을 추가하였고 NHK에 대한 정치인의 개입을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이후 심리와 NHK직원의 진상 규명을 통해 ‘위안부’ 제도와 일본군의 전쟁 가해를 봉쇄하려 했던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언론의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NHK는 정치 개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검증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다. 7년에 걸친 ‘NHK 프로그램 개찬 사건’의 재판은 끝났지만, 보도에 대한 정치 개입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는 드물어 전후 방송사에 남을만한 큰 사건이었다. ‘여성법정’이 예기치 않게 정치와 보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것이다.

전시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발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구 유고와 르완다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도 주요 논의가 되었다. 이에 대응해야 했던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위안부’ 조사를 실시했고, 93년 고노관방장관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이 담긴 담화(‘고노담화’)를 발표했다. 1997년도판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가 기술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우파 장치인, 우익 단체들은 97년부터 교과서 회사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1997년은 ‘위안부’ 부정과가 전면에서 나서게 된 획기적인 해였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사무국장은 아베 신조 의원), ‘일본 회의’를 결성해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안부’라는 단어는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삭제되어 2012년도판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모두 사라졌다.

언론에서도 ‘위안부’는 사라져 갔다. 90년대 초반에는 언론의 ‘위안부’ 보도가 급증했지만, 97년 이후 급감한다. ‘NHK 아카이브’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 97년부터 2011년까지 일상적인 뉴스에서는 다루어도 ‘위안부’ 문제 관련 다큐멘터리나 조사 보도는 거의 제작하지 않았다. 민영방송 프로그램 아카이브인 ‘방송 라이브러리’ (요코하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위안부 보도 공백 15년’이라고 한다.

그 배후에는 정치권의 언론 개입과 압력, 그리고 언론사들에게는 위촉과 자기검열, 정치권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위안부’는 매춘부’, ‘‘위안부’의 피해 증언은 헛소리다’와 같은 거짓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여성법정’은 바로 이런 시대에 열린 것이다.

2012년부터 장기 집권한 두 번째 아베 정권 하에서 정치에 의한 언론보도 지배는 더욱 거세졌다. 13년에는 총리의 ‘친구’ 네 명을 NHK의 경영위원으로 보내, 회장으로 모미이 가츠토(籾井勝人)가 선출되었으며, NHK의 ‘정부의 홍보기관화’가 진행된다. 이 노선은 회장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심각한 것은 정부에 동조하는 ‘편향 보도’가 NHK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정권의 여론 유도는 더욱 쉬워졌다.

4. ‘여성법정’이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과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일본 정부

한편, ‘여성법정’의 성공이 국제사회와 세계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었다. ‘여성법정’의 최종 판결은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는데, 도쿄 재판에서는 재판받지 못한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고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식민지주의와 전시 성폭력을 심판한 것은 일본과 세계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판결은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 와미의 보고서(2001년)와 ILO조약 적용 전문가위원회의 소견(2003년)에도 인용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에는 과테말라와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민중

법정이 열렸고, 구 유고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색도 이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MeToo운동의 원조는 아시아의 ‘위안부’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2018년 노벨 평화상은 콩고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지원한 데니스 무퀘게 의사와 이라크에서 IS의 성노예 피해를 고발한 나디아 무라드씨에게 수여되었다. 이를 통해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가속화되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은 일본에서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관으로 2005년 8월 개관했다. wam의 개관도 ‘여성 법정’을 발안한 마츠이 야요리 씨의 유언과 ‘여성 법정’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동료들의 강한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츠이 씨는 말기암판정을 받은 후 “내 재산과 자료를 모두 맡길테니 ‘위안부’ 자료관을 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2002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위안부’와 전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 수집부터 공문서를 포함한 역사 자료를 발굴, 공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료관·박물관이 필수적이다. 이후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 ‘위안부’ 자료관이 속속 문을 열었다. wam에서 만든 전시 패널도 중국어, 영어, 한국어, 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각국을 순회하며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활동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이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전쟁범죄라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과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와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대부분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위안부’ 문제를 금기시하고 보도를 자제하거나 ‘혐한’의 입장에서 민족차별과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비교적 ‘위안부’ 보도에 힘을 쏟았던 아사히 신문은 2014년 8월 과거 ‘위안부’ 보도의 ‘오보’를 공표해 우파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위안부’ 보도가 잠잠해졌다.

5. 국제적 시민연대를 강화해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의 대부분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의 피해 여성과 여론, 한일 지원단체는 “이것은 당사자를 무시한 정치적 타결이지 해결은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라면 ‘위안부’ 문제는 뒤틀린 채로, 고령이 된 피해 여성들 모두의 수명이 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피해 여성들과 지지자들은 일본의 지지자들과 함께 ‘여성 법정’에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연대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992년부터 시작된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는 2003년 8월 16일로 1,609회를 맞는다. 일본 각지에도 이 ‘수요시위’에 연대하고 호응해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행동’을 하는 지역이 속속 늘어나고 있으며,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연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과 한국,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젊은 세대의 연대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일본 정부는 우파 단체와 민관합동으로 ‘위안부’ 지원 활동에 대한 방해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위안부’의 상징이 된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에 설치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는 철거하려고 기를 쓴다. 그들은 또 2016년에 일본과 피해국 지원단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의 등재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 등재는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우파 단체와 언론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와 wam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우파 일부에서는 “우리는 일본 국내에서 승리했으니 앞으로의 주전장은 해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를 금기시할 뿐만 아니라 ‘협한’, ‘반한’을 부추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조사, 배상,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고 대처해야 할 의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발견된 자료에서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등 사실과 다른 반론을 펼치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은 고노담화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야말로 ‘여성법정’의 ‘판결’과 문제 제기를 재확인하고, 일본이 전쟁 책임, 전후 책임,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직시하고 전쟁의 길로 가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일본을 살아가는 우리 일본인의 책무이다. 특히 ‘헌법 개정’을 숙원 사업으로 공언하고, ‘위안부’에 대한 가해를 부정하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일본의 변화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 군사정권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성법정’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조사 개시와 피해 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 다음 세대에 기억과 기록을 전하며 역사에 남기는 노력을 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야 한다.

<2부>

‘2000년 여성법정’ 과 한일 시민사회 연대

양미강

(2000년 여성법정 당시 한국위원회 실무책임자, 현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2000년법정)과 한일 시민사회 연대

양미강

2000년법정 한국위원회 실무책임자, 현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1. 발표의 목적

- 그동안 2000년법정은 주로 법정 자체의 성과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나, 2000년법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한일 양국 시민운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 2000년법정 이전 아시아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00년법정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본다.
- 2000년법정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시민운동이 어떻게 차이를 극복하면서 2000년법정을 만들어갔는지 구성과 조직, 의미를 살펴본다.
- 2000년법정 이후 한일 양국 시민운동의 연대의 과제와 방향을 살펴본다.

2. 2000년법정의 역사적 맥락: 아시아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1. 1990년 이전

- 윤정옥의 일본답사를 통해 한일시민연대의 맹아 형성
-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소의 설립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운동과 연구활동 토대 마련
- 김학순 등 피해자들의 커밍아웃과 일본 순회 증언활동을 통해 일본시민/일본시민운동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2-2. 아시아연대회의의 책임자처벌 논의

○ 1차 아시아연대회의(1992.8, 한국)

- 한국과 일본, 재일교포, 필리핀, 대만, 태국 등 피해국의 피해자증언 및 각국상황보고
- 강제연행 사실 인정, 진상조사, 공개사죄, 생존자와 가족에게 배상 실시, 교과서 기록 등 논의
- 책임자처벌 논의는 없음

※ 반 보벤 초청 세미나(1992.12, 한국)에서 책임자처벌 논의

-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
- 중대인권 침해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희생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에 실패하는 것과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발표
- 박원순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에서 만인도적 범죄의 기소 가능성 연구와 국내에서 처벌가능한 법률 제정 필요성 언급

○ 2차 아시아연대회의(1993.10, 일본)

- 한국, 북한,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7개국 참여
- 한국의 책임자처벌 문제제기 (보편적 정의를 위한 원칙 강조)
- 일본 단체들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책임자처벌은 불가능하며, 일본군인들의 증언을 받는데 어려움 토로

※ 대표적인 일본 시민운동의 반응

- 시미즈 스미코: 책임자처벌문제는 장기적인 문제, 현재 당면과제는 피해자 생활지원
- 스즈키 유우코: 일본의 운동이 책임자처벌을 주저하는 이유는 일본인의 전쟁책임 인식의 존재양식을 묻는 일과 연관되었다고 지적

○ 3차 아시아연대회의(1995, 서울)

- 해방 50주년을 맞이한 일본 사민당 정권의 국민기금에 관한 반대논의 중심
- 국민기금은 위로금 형태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배상논의 집중

※ 대표적인 일본 시민운동의 반응

- 한국과 일본 시민운동은 국민기금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면서 분열됨

○ 5차 아시아연대회의(1998.4, 서울)

- 한국 발표(지은희):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책임자처벌 제기
- 일본 발표(마쓰이 야요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와 정의를? 글로벌 캠페인 2000 제안
- 일본의 바우넷재팬이 1997년 설립되면서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책임자의 명단을 수집해야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2-3. 아시아연대회의와 2000년법정의 연계성

- 아시아연대운동과의 연계성: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기여하면서 대만,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들을 추동하고 총화
- 한일 시민운동과의 연계성: 한국과 일본내 인식 차이 존재. 한국은 지속적으로 책임자처벌 문제 제기한 반면, 일본은 일본내 운동 확장성, 우선순위 설정 등 이견 존재함. 그러나 바우넷재판 창립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일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2000년법정으로 수렴
- 법적 해결운동과 연계성: 90년대 지속된 일본내 재판 지원운동(한국,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등),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등
- 국제연대운동과 연계성: UN인권기구, ILO 활동을 통한 운동의 확장성과 신뢰성
- 전시 중 성폭력 등 여성인권 침해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와의 연계성: 1990년대 유고, 르완다 등 전쟁 중 여성인권 침해의 중대성과 심각성
- 다음세대 운동과의 연계성: 불행했던 19세기의 유산을 책임자처벌을 통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학생법정 등 다음세대와의 결합 추진

3. 2000년법정의 구성과 의미

3-1. 목적

- 피해생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는 정당하다.
-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명단과 처벌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
- 시효 만료로 기존법정에서 이루지 못한 책임자 처벌을 민간법정을 통해서 역사적 정의를 완성해야 한다.
- 보편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3-2. 개요

- 일정: 2000.12.7.-12, 일본 도쿄 구단회관
- 주최: 아시아 9개국(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
- 참여: 각국 피해자 70여명을 비롯하여 약 1000여명 참여
- 세부일정: 12.7. 개막식 / 12.8. 남북 공동기소, 중국 기소, 환영만찬 / 12.9.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소, 영화제 / 12.10. 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 기소, 문화제 / 12.11. 국제공청회, 피해자와 만남 / 12.12. 판결과 폐막식, 연대시위 / 한일 시민단

체 간담회, 한일청년포럼, 학생법정

3-3. 활동

○ 한국위원회: 법정의 내용과 형식 토론

- 운영위원회
- 각 위원회: 법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 한국사무국: 총무와 간사 3명
- 재외동포 조직을 조직위원회에 포함
- 학생법정위원회

○ 국제실행위원회: 3인 공동대표

- 피해국 대표: 한국 윤정옥
- 가해국 대표: 일본 마쓰이 야요리
- 국제자문위원회 대표: 필리핀 인다이 사호르

※ 재원 마련의 어려움, 각국 기소장 구성의 어려움 등 산적한 과제

※ 마쓰이 야요리와 윤정옥 두명의 헌신과 노력없이 2000년법정 성사되기 어려웠다.

3-4. 한일간의 쟁점

○ 법정의 성격: 모의법정을 넘어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엄격한 형식성에 기초할 경우 기존의 국제법 한계, 시민사회의 메시지 전달의 한계
- 열린 법정에 기초할 경우 시민사회의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법정의 권위 폄하, 신뢰성 훼손
- 법정의 권위 확보차원에서 저명한 법률전문가 초청하여 판사단과 국제검사단 구성(피해국 출신 제외하여 객관성 확보)
- 한국위원회는 러셀법정 모델로 한 연구활동: 1966년 버트란트 러셀이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고발할 최초 민간법정

○ 법정의 구조: 배심원제도, 변호인제도 등 다양한 방식 고려

- 배심원제도는 한일 양국 모두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배제,
- 변호인제도는 기존법정 형식 차용하는 점에서 일본은 찬성, 한국은 일본정부를

변호하게 될 위험성 때문에 반대

- 결론적으로 한국이 양보하여 변호인제도를 채택했으나, 정작 일본은 변호인을 찾지 못해서 법정의 친구들이라는 형태 차용

4. 2000년법정의 성과와 한계

4-1. 성과

- 전시 성폭력의 20세기의 화두를 충실하게 담아냄, 이후 UN은 1325결의안 채택으로 전시성폭력문제를 국제사회가 수용
- 한일시민연대로부터 출발했으나 아시아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글로벌 시민연대 형성
- 한국은 남북공동기소를 통해 남북연대활동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 남/북/재외동포 결합
- 8개 피해국의 기소를 통해 전반적인 진상규명의 윤곽이 드러나고 책임자를 확정
- 피해자의 PSPD 인정과 현재의 무력 중 여성성폭력과의 연계
- 글로벌 시민연대, 청년세대의 결합, 남북연대활동 활성화

4-2. 한계

- 모의법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모의법정 안에 갇혀있음
- 2000년법정 이후를 겨냥한 2000년법정을 확산하는 글로벌 전략의 부재, 역량 미흡
- 2000년법정 이후 각국의 시민운동의 변화: 일본의 백래시 열풍,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기술 삭제, 각국 시민운동의 인적교체, 후속활동 미흡

4-3. 가능성 모색과 과제

- 2000년법정 이후 운동의 다양화와 공동의 작업 결과물: 역사교육운동의 활성화, 한일/한중일 공동교재 발행, 한일 양국정부차원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출범
- 한국 운동은 기억의 재현과 교육으로 전환: 소녀상 건립,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등으로 새로운 영역 시도
- 한국과 일본 모두 보수적 정부의 출현과 임시미봉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시민들과의 갈등과 충돌 진행
- 생존자들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한일 시민사회 내적 동력의 약화
- 2000년법정이 20세기 전쟁과 폭력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충실한 글로벌 시민사회

사회의 ACTION이었다면, 2023년이후 시대적 화두는 무엇인지 공감대 형성이 먼저

-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시민운동은 시민 ‘운동’ 이라는 advocacy를 넘어서, 중간지대에 있는 소위 ‘어정쩡한’ 사람들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높혀나갈지 새롭고 대중적인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2부>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교차적 행위성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교차적 행위성¹⁾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이 발표는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이끈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독자적인 행위성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위안부’ 문제란 무엇이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한일 시민연대라는 틀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존재는 종종 ‘매개’나 ‘가교’라는 역할로 표상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시작을 들여다볼 때 한/일 국민국가의 사이공간(in-between)에서 독자적으로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장을 열어온 재일여성들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 일본에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의 중층적인 구조 아래서 살아온 재일여성들을 한일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적 위치가 아닌, 교차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횡단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한일’ 담론을 역사화하고 탈중심화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된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담론은 전후 피식민지 독립운동이 지향한 탈식민화(decolonization)와 물론 차원이 다르다. 1950년대 탈식민화가 내셔널리즘을 원동력으로 삼았다면 1990년대 포스트식민주의는 역사의 피해자들의 증언, 페미니즘,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를 원동력으로 삼았다. 포스트 식민주의는 서구중심주의나 보편주의를 문제 삼고 성찰하는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강한 영향을 받았지만, 역사적 책임과 주체의 해체를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화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미완의 탈식민적 과제를 끄집어내는 실천적인 운동을 포함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포스트식민주의를 견인해온 가장 상징적인 아젠다였고, 일본 지식계 및 시민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다. 1990년대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는 가해와 피해, 역사의 책임과 주체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을 촉발했는데, 이 엇갈림의 흔적을 드러내보는 것이 발표의 두 번째 과제이다.

1) 이 발표문은 조경희, 「한일여성의 탈중심화, 혹은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재)소환: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정체성 정치」, 『문화/과학』2020년 가을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위안부’ 운동의 시작과 재일여성들

1990년대 탈냉전기는 역사의 종언이 아닌 과거의 불균형한 역사에 대한 피해자-소수자들의 고발과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분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한 움직임은 일본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1990년 12월 정대협 초대 대표 윤정옥의 일본 방문은 ‘위안부’ 문제를 일본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첫 계기가 되었다. 이때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재일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독서모임(조선여성사독서회) 활동을 해오던 17명의 재일여성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윤정옥 선생님을 둘러싼 재일동포 여성모임’이 결성되었다. 매개자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이화여대에 유학중이었던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였다²⁾. 그들은 윤정옥의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팜플렛을 제작했고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좌담회나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김부자의 구술에 따르면 이 때 내부적으로 제작한 팜플렛은 예상 밖으로 주목을 받아 일본시민들에게 많이 팔렸고 출판제안을 받아 책으로 출간되었다.

약 1년 후인 1991년 11월, 그들은 ‘중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넷’)를 결성하기에 이른다.³⁾ 여기에는 김영희(金英姬), 김부자(金富子), 김훈자(金薰子), 박윤남(朴潤南), 박화미(朴和美), 야마시타영애, 양징자(梁澄子) 등 재일 2세 여성들이 참여했다. 같은 시기 오사카에서도 황보강자(皇甫康子) 등 재일여성 9명이 모여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마찬가지로 윤정옥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일본시민들과 함께 강연, 연극 상영, 집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적인 연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⁴⁾. ‘여성넷’ ‘생각하는 모임’ 각각의 발족식에서는 1991년 10월 세상을 떠난 오키나와의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⁵⁾.

같은 해 12월에는 김학순이 일본을 방문하여 소송을 시작했다. 재일여성들은 오사카와 도쿄에서 김학순의 증언집회를 기획했다. 고베, 사카이, 나라, 효고 등에서 집회가 열렸고, 도쿄의 집회장에는 450명의 참가자가 모였다⁶⁾. 자리가 없어서 회의

2) 이 과정에 대해서는 山下英愛, 『新版ナショナリズムの狭間から:「慰安婦」問題とフェミニズムの課題』, 岩波書店, 2021, 서장 참조.

3) ‘여성넷’에 대해서는 金富子, 「在日朝鮮人女性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一九九〇年代のヨソネットの運動経験から」, 『継続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国民」概念・女性の身体・記憶と責任』, 世織書房, 2011;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の主体構築:『従軍慰安婦』問題をめくゝ運動から」, 『F-GENS ジャーナル』 4号, 2005 등을 참조. 일본 ‘위안부’ 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金富子, 「日本の市民運動と『慰安婦』問題解決運動」『歴史評論』761, 2013.9, 참조

4) 皇甫康子, 「知って、どうするのか:在日女性が考える『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 『フェミローク』3, 1992, 22쪽.

5) 在日韓国民民主女性会, 『真の謝罪と補償を求めて 朝鮮人従軍慰安婦』2, 1992.

6) 金富子, 앞의 글, 200쪽.

장 밖 로비에서까지 사람들로 꽉 찼고 증언이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⁷⁾. 이 김학순의 연속 증언집회는 일본사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최초의 집단적 경험이 되었다.

이처럼 재일여성들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는 한국의 여성운동과 공명하면서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일 2세 여성들이 ‘위안부’ 운동에 뛰어든 동기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차별을 내면화했던 자신들에 대한 강렬한 자기성찰이 있었다. 윤정옥의 초청강연 후 진행된 좌담회에서 일본, 한국, 재일 사회에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이 이뤄졌다. 한국에 유학중이었던 야마시타 영애는 한국 여성운동이 민중적 시각이 결여된 보수적 성격을 가졌다고 지적했고, 양징자는 일본에서는 역사인식의 부재만이 아니라 잊어주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⁸⁾.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1970년대에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책이 알려지면서도 왜 재일여성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외면했는가, 라는 점이었다.

‘여성넷’ 멤버들은 윤정옥이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를 번역 출판하면서 제2부에 각자의 글을 수록했는데,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를 알면서도 회피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 재일 2세 김영희는 ‘조선인 여성’으로서 “마치 자신이 대상화되고 호기(好奇)의 시선에 노출된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혹시 나였을 수도…”라는 감각과 함께 제3자가 이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쾌감이 있었음을 토로했다⁹⁾. 박화미는 배봉기를 찍은 야마타니 데즈오(山谷哲夫)의 영화 〈오키나와의 할머니·증언·종군위안부〉(1979)를 본 뒤에도 ‘위안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회상하면서, 이 문제를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재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봤다¹⁰⁾. 특히 일본사회의 식민주의적 시선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재일여성들에게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는 “나였을 수 있다”는 신체감각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재일여성들은 자신들의 교차적 위치에서 진보 재일남성들의 가부장적 논리와 일본인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비역사성을 동시에 비판하는 담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7) 「日本の「慰安婦」をめぐる議論はなぜ後退したのか」, <Wezzy>, 2020. 6. 6.
<https://wezz-y.com/archives/77525>
 8) 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在日同胞女性の会(仮称),『私たちは忘れない 朝鮮人従軍慰安婦: 在日同胞女性からみた従軍慰安婦問題』, 1991, 26-44쪽.
 9) 金英姬, 「忘れることが優しさか」, 尹貞玉 外,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明日をともに創るために』, 三一書房, 1992, 97-98쪽.
 10) 朴和美, 「性の二重規範から『軍慰安婦問題』を読み解く」, 같은 책, 207-208쪽.

1976년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선구적으로 밝혀낸 재일남성 지식인 김일면(金一勉)의 저작에 대해 김부자는 일본정부를 고발하는 자세를 평가하면서도 “‘더럽혀진 몸’ ‘결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전통적 정조관념이야말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말살해온 커다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¹¹⁾. 박화미 또한 ‘위안부’ 제도를 전시하에서 일반 여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본 보수적인 일본인 여성들의 논리와,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직업여성’과 ‘일반여성’으로 구분한 김일면의 논리를 동시에 비판했다¹²⁾. 1980년대에 선구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고발한 재일 남성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여성을 분단하고 ‘무구한 여성’을 동원하는 민족주의 저항 논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재일여성으로서의 각성과 새로운 행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아귀(徐阿貴)는 재일여성들의 ‘여성넷’ 활동에 대해, 그 활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규명과 동시에 재일여성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운동주체가 되면서 민족과 젠더라는 복주(輻輳)적인 차별을 극복하는 이중의 포스트식민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분석했다¹³⁾. 여기에 덧붙인다면, 이전까지 총련, 민단, 한통련 등 민족단체의 틀에서 분단되었던 재일여성들이 국적과 소속을 넘어 만났다는 점에서 포스트냉전의 질서 또한 동시에 작용했다. 여성넷 멤버는 모두 한국적을 가진 재일여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역사성과 함께 “남북의 정치상황을 넘어선다는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인 여성’ ‘우리여성’과 같은 표현을 썼다¹⁴⁾. ‘위안부’ 운동은 식민-냉전-젠더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 기존 남성-민족중심의 재일조선인 아젠다를 여성들의 인식과 감각을 통해 재편성하는 수행적인 운동이었다.

3. 재일여성의 생활세계와 페미니즘의 난관

‘여성넷’ 멤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늦게 온 여성들”이라 부른 것처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재일여성들의 일상은 젠더나 페미니즘 아래 결집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해방 후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재일조선인들에게 영주권과 사회보장이 정비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베트남 전쟁 난민 수용을 계기로 일본은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1981년에는 난민조약을 비준했다. 국제인권체제로의 편입을 계기로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에게도 영주 자격이 주어졌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영주택 등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되었다. 해방 후

11) 金富子, 「韓国女性運動からみた朝鮮人慰安婦問題」, 같은 책, 170쪽.

12) 朴和美, 앞의 글, 223-224쪽.

13) 徐阿貴, 앞의 글, 94쪽.

14) 尹貞玉 外, 앞의 책, 279-280쪽. 金富子, 앞의 글「在日朝鮮人女性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 205-206쪽.

35년 이상이 지나서야 시민적 권리가 생겼지만 당시 재일 2세들은 여전히 취직이나 결혼을 하는데 차별을 겪어야 했다.

서아귀는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절실했던 것이 여성문제가 아닌 민족차별과 남북 분단이었다고 말한 재일여성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고¹⁵⁾ ‘여성넷’ 멤버였던 김부자는 당시 각자의 페미니즘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어 여전히 ‘민족’ 문제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서술했다¹⁶⁾. 해방 후 이국에서의 가난과 복합 차별 속에서 살아온 재일여성들의 삶과 일본의 중산층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거리가 있었을까. 재일여성들의 생활의 실상은 연구자료와 학문적 관심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가려져왔으나¹⁷⁾ 예컨대 재일여성 시인 종추월(宗秋月)의 시에서는 재일여성들의 생활세계를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는 오사카 조선인 집단거주지인 이카이노(猪飼野)의 곱창집 2층에서 계를 타는 재일여성들의 험난한 일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전략) 테이블 위/ 쇼토쿠 태자와/ 먹다 흘린/ 야키니쿠와/ 흠뻑 더러워진/ 맥주잔/ 야비한 응수/ 우먼리브/ 따위/ 헛소리/ 똥배 여자들/ 먼 옛날/ 여기서/ 여자들/ 싸움에 나갔다/ 번뇌와/ 의심암귀/ 불꽃 튀기며/ 술렁거림과/ 승리의 함성과/ 낙담의/ 삼거리/ 솟아나는 땀/ 모공도/ 담보로 (이하, 생략) ¹⁸⁾

1970년대 초에 나온 이 시는 옛 천엔 지폐인 ‘쇼토쿠태자’와 ‘우먼리브’를 고도성장기 일본사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면서 그 주변부에서 음식 냄새와 땀 냄새를 풍기는 재일여성들의 생활세계를 교차시킨다. 은행 용자를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계는 목숨을 담보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독자적인 문화였다. “우먼리브/ 따위/ 헛소리” 라고 읊은 종추월의 생활세계와 1970년대 일본 중산층 여성들의 페미니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을 터이다. 재일여성들의 힘겨운 노동 및 가족 경험을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은 공유할 수 없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풍요와 평화의 전후일본과 재일조선인 사회의 포스트식민성의 격차, 일본사회의 차별적 태도와 무관심 등 민족문제는 재일여성들에게도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송연옥에 따르면 1980년대 기생관광에 반대해 한일 양국의 여성들이 일어섰을 때도 재일여성들의 집단적 참여는 나타나기 어려웠다¹⁹⁾. 그만큼 재일여성들이 해방의

15) 徐阿貴, 앞의 글, 96쪽.

16) 金富子, 앞의 글「在日朝鮮人女性と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 204쪽.

17) 해방 후 재일여성들의 노동과 생활, 저항운동을 서술한 송혜원은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은 물론 재일민족단체에서도 재일여성들을 조사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宋惠媛, 「在日朝鮮人女性の歴史叙述に向けて」, 『歴史評論』796, 2016, 48쪽.

18) 宗秋月, 「頼母子講」(1971), 『猪飼野・女・愛・うた』, プレーンセンター, 1984.

언어를 획득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렸다. 재일여성들은 거주국에서나 고국에서나 민족, 젠더, 계급, 언어적으로 주변화되었고 그 고유한 경험 때문에 더 비가시화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상태에 놓였다. 김벌리 크렌쇼가 여성이니까 흑인을 대표할 수 없고, 흑인이니까 여성을 대표할 수 없는 딜레마를 상호교차성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²⁰⁾ 재일여성들은 여성이기에 민족운동에서 소외되었고, 조선인이기에 일본 페미니즘에서 소외되는 교차적 차별구조 아래에서 자신들의 해방의 언어를 찾아갔다.

송연옥은 대체로 1980년대 말에 되어서야 재일여성들이 민족적인 것이 여성억압적이라는 정치의 함정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정리했다. 즉 재일사회의 반차별운동, 한국의 민주화, 북한 경제위기 등의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국가와 가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기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²¹⁾. 이 과정에서 재일여성들은 ‘일본인’과 ‘남성’들에게 냉정한 비판을 펼치기 시작했다. 황보강자는 “재일조선인 여성은 70년대 세계적인 조류였던 [우먼]리브 운동에서도 완전히 잊혀졌다”고 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재일여성들의 운동에 대해 “여성들의 문제는 만국공통, 함께 힘냅시다!”라고 말을 거는 “양심적인 일본인 여성”이 판을 깨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²²⁾. 오사카에서 활동한 김이사자(金伊佐子)는 “씩씩한 재일여성”을 찬양하는 일본인과 재일남성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재일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은 나에게 별도의 일이 아니다. (중략) 민족문제로 여 ‘성’을 무화하는 재일남자도, 여성문제로 민족 ‘성’을 무화하는 일본 여자도 재일여자에게는 지배와 억압의 가해자다. 그 가해자를 모방, 수용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재일여자가 스스로의 발로 일어설 때 그들은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재일여자와 손을 잡자”고 소리높이 외치는 재일남자도 일본여자도 결국은 각자의 이해 추구하고 속셈으로 재일여자를 번롱하고 세분화된 재일여자들이 하나의 물결을 만드는 것을 저해한다. 번롱되는 층의 취약함에 틈타는 압압하고 뻘뻘한 태도와 사고에 분노를 느끼고, 또 번

19) 宋連玉, 「在日朝鮮人女性とは誰か」, 岩崎稔・大川正彦・中野敏男・李孝徳編, 『継続する植民地主義 ジェンダー/民族/人種/階級』, 青弓社, 2005, 270-272쪽.

20) Kimberlé W.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 1998. 김벌리 크렌쇼/웹진 인-무브 페미니즘 번역모임 번역, 「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 반차별 독트린, 페미니즘 이론,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즘의 비판」, 『웹진 인-무브』 <https://en-movement.net/173>

21) 宋連玉, 「『在日』女性の戦後史」, 藤原書店編集部, 『歴史のなかの「在日」』, 藤原書店, 2005, 148쪽.

22) 皇甫康子, 「見果てぬ夢…在日フェミニズム」, 『フェミローグ』2, 1991, 101-102쪽.

릉되지 않는 힘을 키우는 에너지가 분출됨을 느낀다.

짓밟히는 것을 거부하고 짓밟는 것을 거부한다. 피해자임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가해성에 무자각한 해방운동을 거부하고 중층적인 차별구조 속의 자신이 다시 타자를 짓밟지 않을 해방운동을 탐색한다. 23)

1992년에 발표된 이 글은 재일여성들의 해방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면서 글을 맺는다. 그는 서양과 일본의 페미니즘만이 아니라 ‘조국’과 아시아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공명과 연대를 통해 재일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밑에서부터 현실을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직설적인 이 선언문은 탈냉전기 전지구적 약동성 속 재일여성들의 새로운 행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내적 각성 속에서 재일여성들이 누구보다 깊이 ‘위안부’ 문제에 반응하고 행위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위안부’ 당사자는 아니지만 식민주의에 고통 받은 체험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민족, 젠더, 계급이 중첩되는 존재로서 ‘위안부’의 곁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던 송연옥의 지적처럼²⁴⁾ 재일여성들은 신체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응했고 결과적으로 포스트 식민과 포스트냉전이 얹힌 시대 상황 속에서 교차적인 행위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재일여성들이 딜레마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재일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의 “응축된 모습을 ‘위안부’ 문제 속에 발견”했던 것이었다²⁵⁾.

4. 1995년의 시간성

김학순의 역사적인 증언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은 연달아 이어졌다. 1993년에는 일본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송신도(宋神道)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후 보상청구 재판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여성넷’의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일본시민이 함께하는 재판지원 모임이 결성되었다. 애초에 일본군의 개입을 부정했던 일본정부도 1993년 군의 관여를 시인하는 공식 견해(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전후 50년을 맞은 1995년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무라야마 담화). 언론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빈번히 다뤘다.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 흐름은 탈냉전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인권운동과 함께 추진되었다.

23) 金伊佐子, 「在日女性と解放運動: その創世記に」, 『フェミローグ』3, 1992, 39-40쪽.

24) 宋連玉, 「在日朝鮮人女性とは誰か」, 273쪽.

25) 尹貞玉 外, 앞의 책, 279-280쪽.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에 이어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회 세계여성회의에는 일본에서 약 5000명, 한국에서 약 600명이 참여해 젠더 폭력과 여성인권 문제를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비엔나회의에서는 ‘여성넷’의 박화미가 송신도에 관해 보고했고, 베이징회의에서는 김부자와 박윤남, 황보강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등 여섯 명이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 워크숍을 진행했다²⁶⁾. 그 외에도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여성들이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황보강자의 참관기에 따르면 해외 NGO활동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²⁷⁾. 200명의 참가자들이 현장을 채우고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를 공유했고 2차 대전 시기 ‘위안부’ 피해와 내전 중인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성폭력 고발은 시간을 넘어 서로 연결되면서 국제적인 아젠다를 형성했다.

베이징여성회의에서 재일여성 5명과 우에노 치즈코가 ‘위안부’ 문제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은 1995년이라는 시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기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체념한 결과물인 이 기금을 둘러싸고 한일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위안부’ 운동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대립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여성회의에서 함께 워크숍을 꾸렸던 김부자와 우에노는 그 후 명확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김주희는 한국에서의 1995년이라는 시간성에 주목하면서, 베이징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여성학이라는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지식장이 만들어진 반면 “여성운동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 제도화하고자 한 위로부터의 전략에 의해 아시아는 충분히 사유되지 못했다”²⁸⁾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전후 50년을 맞은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과제는 글로벌화와 맞물리면서 보다 복잡한 정치적 자장 위에 놓였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절묘한 시간성에서 나온 정치적 봉합의 산물이었다. 전후일본을 연명하는 방안으로서의 아시아여성기금은 아시아연대회의나 베이징여성회의 등 여성들의 국제연대 무대에서 강한 비판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위안부’ 운동에도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다.

26) 金富子, 앞의 글, 202.

27) 皇甫康子, 「『慰安婦』問題を訴える」, 『部落解放』 398, 1995.

28) 김주희, 「우에노 치즈코의 젠더-본질주의 비판」, 『여성문학연구』 47호, 2019, 42-44쪽.

5. 포스트모던과 포스트식민의 엇갈림

전후 50년을 벗어난 일본사회는 총체적인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역사수정주의 세력들은 1996년 채택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에 관한 서술 삭제를 요구하면서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결성했다. 그들 캠페인의 결과,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서술은 점점 사라져갔다²⁹⁾.

이 여파는 사회의 곳곳에 퍼졌다. NHK 디렉터였던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는 1995년에 4편, 1996년에 3편의 ‘위안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1997년부터는 아무리 기획서를 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³⁰⁾. ‘위안부’ 문제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최대의 타깃이 된 사실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상징적인 가해자 책임을 추궁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이와 같은 역사수정주의의 영향 속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에는 법정에 관한 NHK 특집 프로그램에서 피해여성과 군인 남성의 증언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압력의 중심에 아베 신조(당시 내각 관방장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안부’ 부정의 움직임은 역사수정주의와 백래시의 접점에서 21세기 일본의 분위기를 예견하는 사건이었다³¹⁾.

1990년대 후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단행본(『내셔널리즘과 젠더』)으로 묶어낸 우에노 치즈코는 일본 식민지배의 강제성과 국가(민족)에 따른 피해 차이를 지적하는 김부자와 서경식, 그리고 ‘위안부’ 사료 발굴에 앞장서온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등과 논쟁을 반복했다. 1998년에 진행된 심포지엄 기록 『내셔널리즘과 ‘위안부’ 문제』에는 역사와 책임, 가해와 피해를 둘러싸고 첨예한 엇갈림이 표면화되었다. 여기에는 김부자가 후기에서 지적한 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듣는가”라는 발화와 청취의 역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에노는 “페미니즘은 내셔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복잡함을 ‘페미니즘 대 내셔널리즘’이라는 구도로 단순화시켰고, 또 “역사에 ‘사실(fact)’도 ‘진실(truth)’도 없다, 그저 특정 시각에서 재구성된 ‘현실(reality)’이 있을 뿐”³²⁾이라는 입장으로 실증주의 역

29)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105호, 2019.

30) 앞의 기사, 「日本の「慰安婦」をめぐる議論はなぜ後退したのか」.

31) 일본에서는 역사수정주의 논객들이 백래시의 주역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한국문학연구』 47, 2019.

32)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12쪽.

사학의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우에노는 동시대 역사부정론에 대해 무력했고 오히려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수정주의 현상에 관대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³³⁾.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커다란 성과였던 2000년 법정의 진행과정에서도 위치성의 차이가 부각되었다. 남북한공동기소단 검사로 참여한 양현아는 각지의 여성들에게 자행된 범죄 양상에서 “식민지성(colonilality)의 탐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반성이 남아있다”고 회상했다³⁴⁾. 우에노는 “페미니즘의 국제연대가 눈앞에서 실현된 듯 보였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끝났을 때 공동대표였던 윤정옥이 일본측 대표 마츠이 야요리를 향해 “민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일본의 페미니스트는 각각의 심정과 논리로 이 운동에 관여했지만 이것을 한국의 페미니스트와 완전히 공유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동조와 공투는 다르다. 연계와 공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연결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³⁵⁾.

우에노는 여성/민족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일본/한국이라는 대립과 연결 짓는다. 즉 일본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민족주의를 대립시킴으로써 보편/특수의 틀을 담론실천에서 재생산한다. 일본인의 책임을 묻는 이들의 지적을 내셔널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이 가해국 여성을 대표-대변하기를 거부하지만, 그의 입장은 역설적으로 국민주의적이다. 포스트 제국의 중산층 여성으로서, 식민성과 전쟁동원의 구체적 맥락을 중요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식민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위치 차이가 말로 서로가 맞닥뜨려 대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90년대 ‘위안부’ 문제가 환기하고 요청한 것은 내셔널리즘이나 주체의 환원이 아닌, 발화의 위치성(positionality)과 타자에 대한 응답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문제였지만 우에노는 일본여성의 ‘위치’에서 ‘응답’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의 페미니즘을 고수했다. “나의 몸과 권리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33) 우에노의 ‘위안부’ 논의와 실증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金富子, 「上野流フェミニズム社会学の落とし穴: 上野-吉見論争とその後を振り返る」, 『商学論纂』 58卷 5-6号, 2017. 여기서 김부자는 특히 우에노의 실증주의 경시와 다원주의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박유하의 『화해를 위하여』 『제국의 위안부』 같은 “새로운 역사수정주의”에 길을 열어준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34) 양현아,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민주법학』 75, 2021, 72쪽. 또 아래의 일본어 논문에서는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민족주의의 발로인지를 자세하게 검토했다. 梁鉉娥, 金友子訳, 「韓国人民『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の責任を求めることは民族主義の発露なのか:体系的強かんの植民地性(coloniality)」,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11.10. 2000년 법정을 둘러싸고 한국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포스트식민적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재일여성에 초점을 맞춘 이 글에서는 포함하지 못했다.

35) 上野千鶴子, 「あえて火中の栗を拾う」,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平凡社, 2004, 248쪽.

그의 응답이었다³⁶⁾.

이 발표는 한/일 국민적 연대 서사를 추적하는 대신 90년대 재일여성들의 포스트 식민적 행위성에 주목함으로써 ‘위안부’ 운동을 역사화, 탈중심화하는 시도이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잠시 열린 포스트식민-포스트냉전적 공론장에서 재일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통해 독자적인 페미니즘을 사유하고 실천했다. 그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과 ‘임의’로 구분하는 남성중심 민족주의를 처음부터 비판해왔다. 남성들에게는 여성폭력을, 여성들에게는 식민주의를 강조하는 교차적인 행위성은 일본의 지식계 및 시민사회와 마주치고 공명하면서도 또 첨예한 엇갈림을 보이기도 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재일여성들의 정체성은 더 다양화되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사색은 풍부한 담론적, 실천적 자원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36)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編, 『シンポジウム—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青木書店, 1998, 119-122쪽. 우에노 치즈코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비판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김주희, 앞의 글. 임경화, 「한일 페미니즘 순환의 (불)가능성: 우에노 치즈코의 일본군 ‘위안부’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호, 2019. 이채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역학관계: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구축과 한일 여성연대 가능성」, 『아시아여성연구』 59, 2020, 등 참조.